



캐나다 G20 정상회담
긴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분출하다

▶ 3면

한미정상회담
천안함, 전작권,
한미FTA

▶ 4면

지방선거 이후
진보진영의 정치 재편 논의의
쟁점과 전망

▶ 8~9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주)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205-146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7

Left21.com

2010년 7월 3일 ~ 7월 16일 | 제35호 | 값 1,800원

리포트21

위기의 이명박 정부가 속죄양을 찾는다

진보연대·참여연대 탄압 중단하라

▶ 관련기사 2, 15면

유럽은 지금 저항의 여름을 맞고 있다

매튜 쿡슨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6월 29일 총파업으로 그리스가 완전 마비됐다.

그리스 공공 노조와 민간 노조는 국회에 상정된 연금 개악법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 연금 개악은 그리스 사회당(Pasok)이 추진하는 정부 지출 삭감 정책의 일부다. 정부의 긴축 정책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파업은 올해 다섯 번째 하루 총파업이었다.

긴축 정책에 맞선 저항으로 그리스 정치권은 큰 위기에 빠졌다.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언론들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 사회당 의원들이 다음

주 있을 연금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당 내부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사회당 대표는 자신이 주선한 노조 활동가와의 만남에서 노동자들에게 비판과 야유를 받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회당 내 분파인 ‘좌파 주도’가 최근 모임을 열었는데, 모든 참석자가 정부를 공격했고 긴축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쉬나스피스모스[그리스 좌파운동·생태운동연합 유류코뮤니스트] 내 우파—이들은 몇 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분열해 신생 정당인 ‘민주 좌파’를 결성하는 등 좌파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한 세력은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좌파적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분열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

했습니다. 정부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다른 좌파와 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 총리인 파판드레우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는 의회 내 좌파를 공격하면서 ‘그리스를 파괴하는 것으로 자본주의를 파괴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동

“사람들은 다음 주 의회 표결에 맞춰 또 한 번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노조들은 아직 추가 행동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당 정부가 붕괴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하지 않으면 공산당과 다른 좌파가 행동을 호소할 것을 알기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주 목요일[6월 24일]

에 2백 개 지역에서 2백만 명이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지난 5월 27일보다 참가자가 두 배나 더 많았다. 파업 참가자도 더 많았다.

반자본주의신당(NPA)의 크리스틴 푸렝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파업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높은 공격 수위에 충격받아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노동자들도 지난주 금요일[6월 25일] 노동총동맹(OGIL)의 총파업 호소에 호응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이탈리아 우익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정책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

13만 명의 전기·가스·수도 노동자 뿐 아니라 공항 노동자, 기차·전차·버

스 운전사를 포함한 민간 부문 노동자들도 4시간 동안 파업했다. 철강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파업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사·공무원 등이 하루 동안 파업했다.

공항 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노동자들은 파업 전부터 투쟁을 벌였다.

볼로냐에서 10만 명, 밀라노에서 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로마 시위에서 철강 노동자들은 “피아트의 공갈 협박에 반대한다”고 소리쳤다. 피아트는 현재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단체 협약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작업장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유럽의 뜨거운 저항은 여름 내내 지속될 것 같다.

번역 김용욱



중국
신세대 노동계급 투쟁의
등장

▶ 12면

경찰 고문 파문
경찰은 왜 고문과
폭력을 일삼는가

▶ 6면



쌍용차
매각의 대안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 11면

나로호와 천리안
지배자들의 관심사가
다른 이유

▶ 6면

세상을 움직이는

“고문이라는 말보다 가혹행위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낫다. 고문은 일제 시대, 권위주의 시대에 쓰던 말”

경찰 고문 파장을 물타기하는
한나라당 안효대

“노 전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면 자살했겠느냐. 검찰 수사를 받았겠느냐”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박관용

“정부와 권력에 대한 불신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패다”

천안함 정부 발표를 안 믿으면
‘부패한 가짜는 국민권익위원장 이재오

“북한 [포르투갈에] 0:7 대패 ... “46명 죽인 적들에 대한 신의 응징””

막나가는 (세계일보)

“거리 응원장에서 천안함 전사자를 위한 묵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 거리응원에 나온 20대의 약반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사실을 믿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한다. ... 정의감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괴물 같은 젊은이들”

조갑제의 히스테리

“로봇 물고기가 실용화되면 로봇 수초도 있어야 하고 로봇 다슬기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로봇 낚시꾼에 로봇 벳사공”

이외수

“삼성이 거둬냈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발언을 했더니, 삼성 임원에게서 입 다무는 조건으로 삼성의 자문 교수 자리를 제안받은 바 있다”

김기원 교수의 폭로

“북한 선수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해설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

차범근, 축구해설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더러운 세상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
팔로우해 주세요

**《레프트21》 페이스북**
팬이 돼 주세요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난 호 《레프트21》 온라인 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기사는 ‘천안함 의혹 제기만 해도 잡아가는 정부’, ‘고려대 문과대 조나온 학생회장을 석방하라’,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다’, ‘참여연대 마녀사냥 중단하라’,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이었습니다.

www.left21.com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피라미드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가징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해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한국진보연대 탄압 중단하라

6월 29일 아침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한충목 공동대표와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지령 수수’ 등의 혐의가 제시돼 있었다. 2000년대 중반에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방북하거나 북한 관계자와 접촉했던 것을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삼고 있다고 한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가 보여 준 민심을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실패가 명백한 세종시마저 끝까지 국회 본회의의 표결에 부치는 오기를 부렸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곳곳에서 반발



6월 29일 홍제동 대공본실 앞에서 열린 한국진보연대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는 또 다른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에 부딪히며, 오히려 정부의 레임덕 조짐을 앞당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으로 보수 우파

를 결집시키고 정부 비판 세력을 억누르며 이런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캐서린 베이버 국제엠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의 지적처럼 국가보안법이 “이견을 잠재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천안함 효과가

“정부의 탄압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을 유엔 안보리에 보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사진)**이 정부의 마녀사냥 배경을 말한다.

Q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문 제기를 ‘이적행위’로 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여연대가 제기한 것은 정부가 이른바 ‘성역’처럼 여겨 온 안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시민들이 개입할 권리, 시민적 통제와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제기를 서둘러 입막음해서, 선불리 나서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선제적 공격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

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시민적 저항이 분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천안함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워낙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원하는 효과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행태가 정말 위태롭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까지 했는데, 왜 파병을 해서 국민들을 무장갈등의 악순환 속으로 휘말리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심정이지 싶어요.

정부 탄압 이후 참여연대 가입자가 1천5백명 정도 늘어난 것도, 상식 밖의 공격에 대한 위기 의식이 발동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도가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Q 정부는 ‘국제적 위신 추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코리아라는 걸 내걸었죠.

그런데 정부가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은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격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천안함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게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러시아, 중국)이 사실관계의 허점들을 용인하면서까지 남한을 두둔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이렇게 유엔에서의 외교적 성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속죄양으로 삼아 정부 자신의 무리한 외교행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Q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의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보공개 청구, 국정조사 요구 등을 지속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기능 중 하나가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없었다면 더 망했을 것”(경기도지사 김문수)이라고 보면서 천안함 북풍몰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외부의 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내부의 적’이라는 핑계로 시민 사회단체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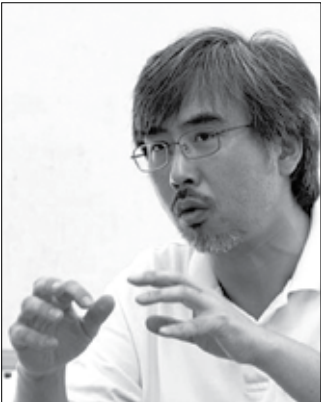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가 이미 한 차례 마녀사냥을 당했고, 이제는 한국진보연대로 마녀사냥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고 한미FTA를 연내 비준하기로 합의한 “더러운 거래”에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속죄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진보연대의 그동안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매도하며 진보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거나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마녀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

전지윤



고,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저희가 굴하지 않고 정부를 계속 날서게 비판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고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위해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박설

4대강은 당장 중단돼야 할 죽음의 사업

6월 28일, 낙동강 준설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한국전쟁 당시 투하된 불발탄의 ‘공격’을 받았다. 이미 4대강 공사 도중 한국전쟁 때 투하된 불발탄 발견이 여덟 건이나 되는데, 급기야 이날은 작업 도중 준설기 안에서 폭발한 것이다.

현장에선 “불발탄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소식을 늘 염두에 두고 조심스레 작업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칠곡보의 지택진 대우건설 현장소장).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것이다.

상용직 일자리는 1백30개 뿐이고 나머지 95퍼센트가 일용직인 ‘4대강’ 일자리는 이제 과로사 위험도 모자라 폭발의 공포가 함

께하는 최악의 일자리가 됐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거가 점점 힘을 얻기 어려워지자, 최근 정부는 홍수 대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토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부분 의혹이 해소”(청와대 정부수석 박형준)된다면서 말이다.

죽기살기

그러나 문제는 ‘의혹’이 아니라 정부의 4대강 추진 논리가 모두 허구라는 ‘사실’에 있다.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4대강 사업 국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국의 하천 복원 전문가 랜돌프 헤스터 교수는 “제방이 오히려 홍수를 일으키며 ‘수로 큰

것을 하나로 내어서 거기에 모든 물들이 집중 됴으로써 유속이 점점 빨라지고 그래서 ... 홍수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진정한 홍수 대비책은 ‘준설과 구조물 위주의 홍수 대책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반대 의견에 재갈을 물리느라 여념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6월 ‘4대강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 대회’를 개최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지사 안희정이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을 빼면 수용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 바짓가랑이 잡고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본

다”고 말한 것은 우스스럽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중단 연석회의’의 요구처럼 4대강 사업 전면 백지화를 위해 소속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조처하도록 해야 한다. 영산강 사업을 지지하는 민주당 전남도지사 박준영이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에도 단호하게 조처해야 한다.

‘영산강 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은 6월 30일 “박준영 도지사 규탄 및 영산강 지키기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날 도지사 사퇴 촉구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7월 3일 오후 6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4대강 사업 중

단과 MB심판을 위한 규탄대회”는 ‘4대강 죽이기’를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에 반대해 각계 단체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미 공사의 20퍼센트가 진행되었으니 체념하라’는 4대강 찬성론자의 주장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 환자의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당장 멈춰야 한다. 이미 배를 갈랐다고 수술을 계속 하는 것은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면 레임덕이고 임기가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죽기살기로 덤벼드는 이명박에 맞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녹색연합 윤상훈)한다.

김세원

노동자들이 긴축과 전쟁에 분노하다

미셸 로비두

캐나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주도적 활동가'

“기업 탐욕이야말로 진정한 테러다.” 이것은 2만 5천 명이 참가한 캐나다 토론토 G20 반대 시위에서 파업중인 발레 인코 광부 노동자들이 외친 구호였다. 광부 노동자 대열 뒤로 철강 노동자들 1천여 명이 행진했다.

시위대가 행진하면서 도심이 마비됐다.

정상들이 수 킬로미터나 처진 철조망과 1만 2천 명의 경찰 뒤에 숨어 있었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 가져 온 재앙의 해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거래에 ‘로빈 후드 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많은 노조 활동가들은 그린피스, 옥스팜, 앰네스티, 여성 단체들과 함께 행진했다.

토론토에 사는 에티오피아인, 타밀족, 소말리아인도 시위에 대거 참가했다.

반전 시위에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된 캐나다 병사의 어머니인 호지에 포르카디아가 참가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이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같은 병사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연장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언론들은 시위중에 발생한 산발적인 기물 파손 행위를 묻고 늘어졌다. 그러나 이날 진정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G20 정상이었다.

해악적인

그들은 2013년까지 G20 국가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전 세계 노동자와 빈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할 것이다. 미국에서만도 정부 지출이 7천8백억 달러나 삭감돼야 한다.

시민단체인 캐나다회의의 의장 모드



“캐나다는 학살을 숨길 수 없다” 경찰 폭력 속에서도 울려 퍼진 전쟁과 기업 탐욕에 맞선 목소리

발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민영화와 정부 지출 삭감 때문에 사람들은 토요일 [6월 26일] 오후 시위에서 보여 줬듯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악적인 경제와 정치인들 — 이자들은 상식도 없을 뿐 아니라 동정심도 없습니다 — 에 의해 무시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캐나다 경찰은 사흘간 열린 정상회담 동안 대대적인 작전을 벌여 9백 명이 넘는 사람을 연행했다. 연행된 사람들은 경찰들이 난폭하게 굴었다고 말했다.

몽둥이를 든 시위 집안 경찰이 캐나다 국가를 부르던 한 시위대를 공격하기도 했다. 또 경찰이 사람들 수백 명을 포위하기도 했는데, 고립된 사람의 대

다수는 쇼핑객과 행인이었다. 경찰은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하고는 연행했다.

연행된 사람들 중에는 시위를 보도하던 언론인들도 있었다. 경찰은 독립 비디오 아티스트인 아담 맥아이작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의 갈비뼈를 밟았다.

그는 심박조정기를 차고 있다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테이저총[전기 화살 총]을 발사했다. 그는 병원에 실려 갔고 수갑이 채워진 채 4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경찰 폭력과 무차별 연행 때문에 사람들은 경찰과 캐나다 정부에 분노를 터뜨렸다.

연행자 지원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행자 다수가 아직도 ‘토론토나

모 수용소’로 [비코아] 불리는 임시 수용소의 끔찍한 조건 아래 구금돼 있다.

풀려난 여성들은 경찰이 성폭력 위협을 했다고 말했다.

토요일 밤, 파업중인 노보텔 호텔 노동자들에 연대를 보내는 평화적인 연좌 시위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우체국 노조 작업장 대표 줄리انا 푸마갈리는 “구금됐을 때 나체로 몸수색을 받아 큰 충격을 받은 젊은 여성들을 상담해 줬다”고 증언했다.

경찰 만행과 정부의 공포 분위기 조성에도 수만 명은 자신의 의견을 알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긴축으로 노동자들을 더 혹독하게 공격하기

6월 말에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결과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미래를 보여 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G20 정상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정상회의는 각국 정부가 추진할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이 정부 재정을 줄이는 긴축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에 각국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럽 재정 위기가 더 번질까 봐 노심초사한 유럽과, 긴축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봐 더 전면공급했던 미국 사이에서 말이다.

그래서 캐나다 정상회의는 모순적이게도 재정 긴축을 합의해 놓고도 “재정 긴축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구절을 포함시켰다.

6월 초 부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내수 확대와 재정 긴축을 둘 다 합의한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마치 네모난 삼각형을 그리려는 것과 같다.

갈등

캐나다의 저명한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캐나다 정상회의가 가져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충격적일 정도의 긴축 규모를 보면 위기의 대가를 치를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연금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최근 유럽 재정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부실 금융권을 규제하느라 정부가 빚을 지자, 규제받은 글로벌 금융기관 특히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투기펀드들이 정부에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바람에 빚 규모가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그리스 위기의 핵심 원인이다.

보통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부활한 글로벌 금융기관이 이제는 공무원 임금, 사회복지 연금 등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망가뜨려야만 돈을 빌려 주겠다고 엮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물에 빠진 걸 구해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G20은 이들이 요구하는 긴축 요구를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따라야 할 방향으로 포장하고 강권하고 있다.

더욱이 캐나다 정상회의가 핵심으로 강조한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은 세계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릴 공산이 매우 크다.

재정 긴축은 대중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 위축은 경제 위기를 더 부채질할 것이다. 모순이게도 긴축을 강권하는 IMF 자신이 그리스가 긴축 정책을 도입하면 앞으로 2년간 성장률이 7퍼센트나 줄어든 거라 예측하고 있다.

한편, G20의 금융규제안은 각론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실질적인 합의는 전혀 없었다. 은행에는 완전히 물 건너가서 “사실상 폐기됐다.”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신용평가사,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 문제 등 기존 합의사항을 두고도 원천치만 확인했다. 경제 위기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면서 정작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캐나다 정상회의는 G20의 현주소를 아주 잘 보여 줬다.

김여진

한국에서도 G20 항의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G20에 항의하는 공동기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민주노총, 민주운동 단체, NGO 등 25개 단체가 모여 G20 공동대응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참가 단체들은 준비위원회의 목표를 ‘G20 규탄’, ‘이명박 정부 규탄’으로 정했다.

G20이 세계경제 위기를 개도국과 전 세계 민중에게 전가하는 기구임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것뿐 아니라 G20 정상 회담을 핑계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밝힌 것이다.

참가 단체들은 G20에 항의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G20 대응을 위한 주요 의제도 제시했다.

좋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금융 통제와 투기자본 과세, 환경과 기후변화, 자유무역협정과 초국적기업 비판, 식량 위기, 민주주의와 인권, 빈곤과 개발, 강요된 이주, 안보와 평화, G20과 여성, 문화다양성과 지적재산권, 공공서비스….

또, 정상회의가 있는 주간(11월 7~13일)에 항의 개막식을 포함해 다양한 포럼과 행사를 조직하기로 했다. 정

상회의가 시작되는 날(11월 11일)에는 대중집회와 행진도 조직하기로 했다.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는 각국의 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서울 정상회의의 항의 행동에 함께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규탄

일부 참가 단체들은 사무국도 두지 않는 느슨한 협의체로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싶어 한다. 많은 민주운동 단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실제로 G20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입장을 내고 항의 행동을 조직하려면 여러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필요에 따른 모종의 결정도 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7월 9일에 공개적인 첫 G20 대응 워크숍이 있을 예정이다. 1부에서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2부에서는 ‘G20 정상회의의 비판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각 단체들의 주장을 듣고 종합토론을 한다. G20 대응에 관한 첫 토론회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하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의 부담을 떠넘기려는 G20과 G20을 이용해

대중적 반감을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한다. G20 공동대응 준

비위원회에 더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길 바란다.

김여진



미국의 군사 전략, 전작권 그리고 한미동맹

6월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이 유엔 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후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됐지만 전작권은 60년 동안 줄곧 미군이 갖고 있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2012년에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부시 정부와 합의했지만, 이번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대국에게 제 나라 군대 통제권을 넘겨준 데에 굴욕감을 느끼는 민중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합의를 했다.

이명박 정부와 우익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올해 천안함 “폭침” 등 지난해부터 북한 위협이 고조됐기 때문에 이양 시점을 연기하게 됐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해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 문제로 보자면, 미국의 핵 선제공격 위협과 각종 제재 등이 원인을 제공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정부 발표를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남한은 이미 1980년대 이래 북한 군사력을 앞섰고, 지금은 월등히 앞서고 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도 미국의 국방장관은 한국의 방어 능력이 충분하다며 전작권 이양 연기에 반대했다.

즉, ‘북한 위협’이 본질이 아니다. 전작권 이양 문제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관련돼 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구실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미군 기지에 흩어져 있는 군대를 언제 어디서든 분쟁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 체제로 재편하려 해 왔다.

그런데 만약 한국군의 전작권이 미국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의도치 않은 남북 간 분쟁에 미군이 자동으로 휘말릴 위험이 있다. 그리 된다면 다른 중요한 전선으로 병력을 집중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거듭 전작권 이양을 요구해 왔다.

신속 기동군

그러나 남한의 우익들은 전작권 이양이 한미동맹의 약화와 남한의 위상 축소를 낳을까 봐 우려해, 전작권 이양을 반대해 왔다. 물론 한미동맹을 신주 단지모시듯이 다루는 우익들이 미국의 의사를 근본에서 거스르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전작권 이양을 근본에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익들은 전작권 문제를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듯하다.

2007년 전작권 이양 합의 때도 우익들은 “핵 역지력이 필수”라며 전작권 문제를 남한의 핵무장 권리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다.

지금도 우익들은 전작권 이양 시점까지 한국군의 방위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사일방어 체제(MD)에 쓰이는 무기인 고고도 무인 항공기(글로벌 호크), 공중조기경보기와 핵 선제공격 용 벙커버스터 폭탄 등을 도입해 대북 정밀 감시·타격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해제나 핵 재처리 시설 확보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전작권 이양 연기 발표는 천안함 문제와 긴밀히 연관돼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이양 연기 발표를 통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고 친미우파들을 만족시키려 한 듯하다.



화사한 웃음 뒤에 감춰진 위험한 거래

물론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많은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재천명하는 데에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려 했다. 그래서 오바마는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전작권 문제를 포함해 이명박 정부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후텐마 기지 문제도 유리하게 해결될 상태이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완료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작권 이양을 몇 년 연기하는 게 미국의 세계전략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한 오바마가 전작권 이양 연기 대신에 이명박 정부한테서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과 한미FTA 재논의에서 큰 폭의 양보를 약속받았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전작권 이양은 지지해야 마땅하지만, 전작권 이양이 곧 한미동맹의 약화나 폐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은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동맹국들에게 군사력을 증강해 자국 방위

를 책임지고 미국의 패권 전략에 협조하도록 요구해 왔다.

전작권이 이양되더라도 한국군은 노무현 정부 때 그랬듯이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며 해외 파병 등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여전히 협조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작권 이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남한 정부의 협조에 반대하는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정병호

의혹 속에서도 긴장 고조에 이용되는 천안함 사건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6월 29일 언론 3단체 설명회에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

우선 합조단은 자신들이 5월 20일에 제시했던 어뢰 설계도가 가짜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했다.

어뢰 폭발 시 1백 퍼센트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오기 힘들다는 버지니아 공대 이승현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발견된 것은 세계 최초이며 “산에서 고래를 만난 것과 같은 발견”이라고 둘러대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참여연대나 진보연대에 대한 마녀사냥과 탄압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 알력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재천명하는 데에 이용하려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나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힘든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특정 사안에서 미국에 협조하면서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는

것은 바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G8 정상 공동성명에 북한을 비난하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이조차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그러자 초조해진 오바마는 G20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선을 넘었다는 점을 후진타오 주석이 인정하길 바란다”며 노골적으로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러자 중국 〈인민일보〉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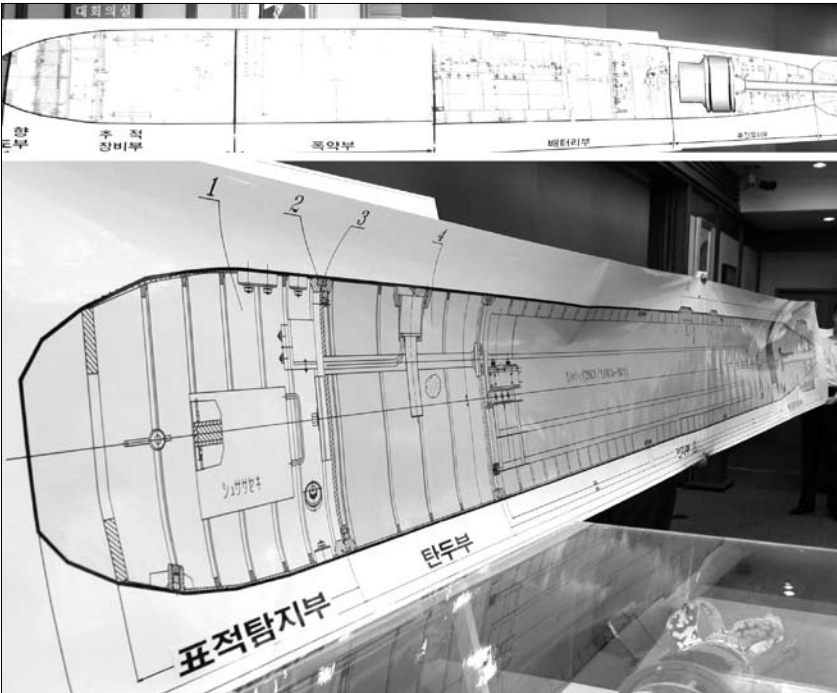
더구나 한미 서해 군사 훈련 계획에 대응해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 훈

련 계획을 발표하며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이렇듯 천안함 사건과 그를 둘러싼 각축은 강대국 간 패권 경쟁 체제인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는 우발적 사건조차 급제열간 간 위험천만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뿐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들 간 경쟁 체제 자체에도 반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정병호



날조된 어뢰설계도(위), 새롭게 공개한 어뢰 설계도(아래)는 무슨 수로 믿나

국가정보원 제공

한미FTA 재논의 합의,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

이명박은 캐나다에서 열린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대신 한미FTA 재논의를 양보했다. 표현은 재논의지만, 기존 협정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협상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쇄고기와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개방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한미FTA 비준을 미뤘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재협상이 합의됐으니 미국은 우선 연령 제한없이 쇄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촛불항쟁 당시 정부는 추가 협상을 벌여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쇄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후퇴시키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상원은 한국의 쇄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촛불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이를 두고 “2008년 졸속 협상 때, 촛불을 불렀었던 내용 가운데 잠정적으로 중단된 부분을 풀어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들먹일 것”이라 예상했

다.

미국산 쇄고기 완전 개방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이는 올해 위생 조건에 불합격된 수입 쇄고기의 95퍼센트가 미국산이라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은 자동차 수입 규제도 완화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는 올 3월에 내놓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와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따른 세금이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대형차에 매기는 관세를 낮추고 환경 규제 조항을 완화할 수 있다. 보건 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서민하고 전혀 상관없는 미국 대형차에 대한 규제 완화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했다.

이번 아니라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요구 즉, 반드시 일정 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쿼터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경찰차·소방차 등을 미국차로 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미FTA 재논의는 미국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환경을 내팽개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국·미국 기업주들의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 온갖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한미FTA는 재논의가 아니라 완전히 폐기돼야 마땅하다.

박건희

아프가니스탄 전쟁



칸다하르 주의 한 마을. 다른 병사들이 마을을 수색하는 동안 사람들을 감시하는 영국 파병군 병사

지배자들의 분열상이 드러나다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확신
이 서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리처드 육군 참모총장
이 영국 BBC 라디오에 출연해 내뱉은
말이다.
“완벽한 승리”는 애당초 아프가니스
탄에서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미군과 나토군이
망신당하며 쫓겨나지 않을지를 걱정해
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
스탄 전쟁에 한 발을 걸치려고 7월 1일
‘오쉬노’ 부대를 파병한다. 유엔의 요청
이 있으면 언제든 한 달 이내에 신속 파
병이 가능한 해외파병 상비부대도 7월
1일부터 창설한다. 국회 동의도 받기
전에 파병 준비를 완료해 놓고 국회의
원들에게 파병 동의안에 서명하라는
풀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
관 스탠리 맥크리스탈이 <롤링스톤>과
한 인터뷰에서 “오바마에 실망했다”고
말했다가 경질된 것은 시사적이다. 이
사건은 이 전쟁의 수뇌부들이 빛이 보
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서로 물어뜯으
며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것을 드러냈
다.
6월에 나토군 월별 사망자가 전쟁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자 각국 정상
들도 철군 약속을 하기 시작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2015년 총선
전에 영국군을 철군시키겠다고 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남부 가즈니 주에
서 폴란드 군이 로켓 공격으로 사망한
직후 폴란드 정부도 2013년 내에 철군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
장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즉각적인 철군
카드를 내놓지 않았다.
오바마도 패색이 짙은 전황과 국내

외 반전 여론을 의식해 지난해 증파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2011년 철군 카드
를 내놓았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발을
빼려면 지금까지 쏟아 부은 엄청난 전
비와 군인들의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
지 보여 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오리무중
이처럼 이 전쟁이 어디를 향하고 있
고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오
리무중에 빠지면서 오바마와 전쟁광
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리언 파네타는 “아프
가니스탄 전쟁은 예상보다 길고 험할
것”이라고 했다.
8월 라마단이 오기 전에 탈레반의
저항 의지를 꺾겠다던 칸다하르 대공
세는 지연되고 있고, 전쟁광들의 묵인
속에서 추진되던 카르자이의 평화협상

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뉴욕 타임스>는 카르자이가
파슈툰 족 민족주의에 근거해 탈레반
과 평화협상을 하면서 나머지 종족들
을 배제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에 타지
크 족, 우즈베크 족, 하자라 족이 카르자
이에 반대해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
하는 보도를 했다.
“평화와 재건”이라는 구체적인 계
획을 실행하는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
을 완수하는 것이라던 오바마의 계획
은 이제 더 큰 혼란 속에서 좌초하고 있
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0년째로 미
군 해외 파병 역사상 가장 길다. 이 전
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도 마찬가지로
다.
김덕엽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획팀장

긴축에 맞선
공동 행동을 논의한
유럽 급진좌파

그리스에서 시작된 긴축 움직임이 포르투
갈과 스페인을 거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체 유럽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6월 15일 프
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초청으로 유
럽 일곱 나라의 급진좌파 정당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떻게 맞서 싸울지를 논의
했다.
그들은 “임금과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고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공동의 투쟁”을 벌
이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다양한 긴축
계획에 반대하는 저항과 시위를 조직”하고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했
다.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연합체인 안타르시
아의 타소스 아나스타시오스는, 선거 때 “물
가인상을 넘는 임금 인상”을 약속했다가 지
금은 임금 삭감을 추진하는 파판드레우 그리
스 사회당 정부를 비판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크리스
뱌머리는 이주노동자 등을 속죄양으로 삼
으려는 시도에 반대해 “진정으로 위기에 책
임이 있는 자들을 폭로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아일랜드 사회주의당의 의원 조 히긴스는
“금융시장이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데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좌파당 의원인 안드레지 훈코는 긴축
에 맞선 “저항을 조직하고 좌파 세력을 재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올 9월 긴축에 맞선 유럽 공동
행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김용욱

타이 붉은 셔츠
국제 방어 운동

타이 민주화 운동인 붉은 셔츠를 방어하는
활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대변인 올
리비에 브장스노, 필리핀 국회의원이자 남반
구조청 소장인 월든 벨로, 영국 사회주의노
동자당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에 망명중
인 타이 좌파 활동가 자일스 자이 웡파콘, 다
함께 최일봉, 경상대 교수 정성진 등 저명한
좌파 지식인과 활동가 6백여 명이 붉은 셔츠
방어 성명서에 서명했다.
국제 성명서는 이렇게 말한다. “두 달 동안
타이 붉은 셔츠 운동은 민주주의와 사회 정
의를 실현하고자 방콕 시내에서 단호하게 투
쟁했다.
“아피싯 정부는 이런 요구에 폭력과 탄압
으로 대응했다. 아피싯 정부는 붉은 셔츠 시
위를 해산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했고 인권을
쳐밟하게 짓밟았다. 89명이 죽고 거의 2천
명이 다쳤다.
“정부는 붉은 셔츠를 ‘테러리스트’ 취급한
다. 붉은 셔츠는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된 복
잡한 운동이다. 그러나 구성원 대다수는 가
장 기초적인 정치적 권리 — 예컨대 선거 결
과를 인정하는 것 —조차 박탈당한 평범한
빈민들이다.
“전 세계의 모든 진보적 민주적 조직들은
붉은 셔츠 탄압 중단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붉은 셔츠를 상대로
한 공갈협박 중단과 붉은 셔츠 정치수의 석
방을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
다.
“타이 정부는 즉각 계엄령을 철폐하고 민
주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타이 정부는 붉
은 셔츠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수를 즉
각 석방해야 한다.”
성명서와 서명자 명단은 [http://
www.europe-solidaire.org/spip.
php?article17832](http://www.europe-solidaire.org/spip.php?article178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욱

재앙적인 BP의 멕시코만 원유 제거 작업

BP는 ‘신참’ 앨런 크루즈의 삶을 파
괴했고 그는 지난주에 자신의 삶을 포
기했다. 앨런의 자살은 BP가 계속 시
행하는 파괴의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
일 뿐이다.
앨런은 낚시꾼 30명 정도가 자주 전
세를 내서 낚시 원정에 나가던 고기잡
이 배의 선장이었다. 지난 4월 20일 노
동자 11명을 죽이고 환경 대재앙을 일
으킨 딥워터호라이즌 석유시추선 폭발
사고는 그의 삶을 파괴했다.
재난은 수산업을 파괴했고 해안은
석유로 뒤덮였다.
돈을 벌 길은 배를 타고 BP의 원유
제거 작업(‘기회의 배’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것뿐이었다.
몇 시간 동안 석유를 따라 다닌 뒤,
신참은 멍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의 친구인 코터 윌리엄스는 이러
게 말했다.
“첫날 그가 일을 나갔다 왔을 때 제
가 이렇게 말했죠, ‘어이 신참, 무슨 생
각해?’
“그는 머릿속이 엉망이 돼 버려서 아
무 생각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뒤 2주 동안 크루즈는 더 말수가
적어졌고 몸무게도 13킬로그램이나
줄었다.
앨런이 자기 자신을 쏜 뒤 BP는 이



기름띠로 오염된 멕시코만

지역에 피해 상담 전문가들을 파견해
‘기술적인 재해에 대처하기’라는 소책
자를 배포했다.
허리케인
BP의 기름 제거 작업에 참가한 노동
자 1백68명이 지금도 심각한 건강 문
제를 겪고 있다. 그리고 기름 제거 작
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난 곳에서는 예순 척이 넘는
배가 기름을 견어내 태우거나 위험한
화학 물질로 분산시키거나 심지어 다
시 바다에 투척하고 있다.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감압유정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거대한 시추장비

가 해저를 뚫고 있다. 허리케인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해야 할 것이다. 감압유정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시추 장비와 배는 대형 폭풍
을 견디지 못한다.
한편, 사고유정의 원유 분출 속도는
BP가 처음 주장한 속도의 70배가 넘
는다.
지난주에 로봇 잠수정이 유정 덮개
를 박살내는 바람에, 유출되는 원유의
절반 가량을 사이펀(대기 압력을 이용
해 액체를 하나의 용기에서 다른 용기
로 옮기는 데 쓰는 관)으로 뽑아내려는
시도가 중단됐다.
현재 감압유정 시추는 해저 1만 1천

피트까지 이르렀는데 유정에 진흙과
시멘트를 쏟아 부어 구멍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도 유정의 상태를 모른
다. 감압유정에서 일한 적이 있는 지
구물리학자 찰스 웨스트는 유정 아랫
부분의 [유정을 감싸고 있는] 철 구조
물 주변이 부식돼 있을 것 같다고 말
했다.
그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철 구조
물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순가락으로
스파게티 한 가닥을 잡으려고 해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안의 기름 제거 작업도 사정은 마
찬가지다. 노르웨이 만 해안을 따라 몇주
째 기름으로 덮여 있는 해변의 작업은
그냥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
‘기름 제거’ 작업은 고품 쓰레기 1천
3백 톤을 만들어냈다.
기름에 절은 모래와 쓰레기더미가
세 개 주에 걸쳐 흩어져 있다. 쓰레기
들은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보
통의 생활폐기물과 함께 땅에 묻힐 수
있다.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가 노골
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시아먼 바스케터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번역 장호중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경찰의 구실은 무엇일까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으로 경찰의 폭력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었다. 서울경찰청장 조현오는 “일개 서와 팀에 국한된 것”이라며 서둘러 분노를 잠재우려 한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맑은 물을 흐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문 등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경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한국 경찰은 일제시대 경무국 시절부터 피의자 고문하기를 일상으로 여겼다. 수많은 민족해방 투사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일제 경찰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됐다.

해방 뒤에도 경찰의 고문 행태는 계속됐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진 사건,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전국의 경찰서를 누비며 수백 명을 고문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권 때조차 검찰·경찰·국정원 같은 수사기관들의 폭행, 가혹 행위, 직권 남용, 불법 체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은 해마다 8백~1천 건에 이르렀다.

한중

경찰이나 검찰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번 양천서 고문 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22명 거의 다가 절도 사건 피의자들로서 하나같이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폭력과 그것을 덮으려는 부패에 진저리를 내면서도, 사람들 다수는 경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없으면 범죄가 만연할 것이고 사회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들 한다.

얼핏 보면 이 사회가 “법 앞에 평등”한 사회처럼 보이듯이 경찰도 모든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똑같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옥탑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살아가는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나 대형 은행의 금고가 털렸을 때나 경찰이 동등하게 성실한 수사에 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옥탑방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출동하기도 꺼릴 뿐 아니라 온다 해도 심드렁하게 “좀도둑이 한 일이예요. 이런 건 잡을 수도 없어요” 하는 게 끝이다. 반대로 은행 금고가 털렸을 때는 언론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수사대를 동원한다 어쩐다 하며 엄청난 인력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사회의 꼭대기에 있는 자본가들의 재산 — 이 사회 전체의 부를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 을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경찰의 주 업무다.

자본가들은 한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지배하려면 군대나 경찰 같은 강제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노동계급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자본가들의 재산을 지키는 데 일상으로 군대를 사용하면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키기 십상이므로, 자본가들은 그 일을 할 기구로서 근대 경찰을 창설했다.

예컨대, 런던시경이 생겨난 것은 차티스트 운동 직전 노동자들이 노동 조합을 결성해 자신을 조직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억압적인 상황이었지만 몇 차례 대규

모 파업을 벌였다. 대도시 곳곳에 근거지를 두고 운동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던 경찰은 차티스트 운동이 한창일 때 특수 경찰관을 10만 명이나 총원해 운동을 탄압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 경찰 손에는 총, 곤봉, 방패가 쥐어졌으며 고문도 즐겨 사용하게 됐다.

오늘날에도 경찰은 노동자들이 임금상 등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해 파업을 하면 기업주들의 부를 지켜주고자 폭력적으로 파업노동자들을 탄압한다.

경찰은 파업으로 기업주들이 부를 쌓아 올리는 데 지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을 구속하지만,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해 노동자들의 삶을 뿌리채 앗아가는 기업주들, 분식회계(=사기)를 일삼고 검은 돈을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기업주들은 거의 구속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설사 구속되더라도 금세 사면돼 이견히나 김승현처럼 계속 명명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의협심에서 경찰이 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룰을 따라 부패하고 냉혹한 부자들의 파수꾼이 되든지 옷을 벗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

경찰 중에는 노동계급 출신이 상당수이지만, 그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다. 그들 본연의 업무상 자신이 재산을 지켜주는 부자들은 우려했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은 적대시하게끔 훈련을 받는다.

파업 노동자들이나 시위대와 언제나 대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경찰 업무에서는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형 인간들로 지목한다. 경찰이 대대적인 검문 검색을 벌이는 곳은 언제나 노동계급 거주지다(이 때문에 ‘히대의 탈주범’ 신상원은 주로 강남에서 지냈다고 한다).

파수꾼

많은 사람들은 살인이나 강간, 강도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있어야 한다고 믿지만, 오히려 경찰은 범죄를 낚는 이 체제를 지켜주는 구실을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끔찍한 가난과 실업이 만연하니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주들은 부를 쌓아 올리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기꺼이 전쟁 — 전쟁은 살인, 공공시설·기물 파괴, 방화를 포함한다 — 이라고 벌이고 언론을 비롯한 온갖 선전 수단을 통해 그것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가 절망에 빠져 부자들을 따라잡고자 그런 범죄 행위를 모방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범죄를 줄이려고 1퍼센트의 수고를 한다면, 나머지 99퍼센트의 수고와 에너지는 그런 범죄를 양산하는 이 체제와 재산 관계를 보호하는 데 쏟아붓는다.

그래서 경찰이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고문 등 폭력 행위를 일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다.

조승희



지난해 2월 28일 밤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 후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경찰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시도 좌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7월 1일부터 야간 옥외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2008년 촛불의 성과였다.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집시법을 개악하려 했지만 좌절됐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을 막아낸 의미 있는 승리다. 또,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의 곤궁한 처지를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한나라당과 우익 언론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인 한나라당 안경률은 “집시법 10조가 효력을 잃으면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혼란스러워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동안 시민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

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정부와 우익들은 야간 촛불시위가 폭력적이라 주장하지만 진정 폭력적이었던 것은 곤봉과 방패, 물대포로 중무장하고 군화발로 시민을 짓밟고 특공대까지 투입해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과 정부였다.

폭력

정부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서울광장 등 시내 중심에서 열리는 야간 집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가 낄을 반발과 저항을 억누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집시법 개악의 좌절로 이것이 어려워질까 봐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주거지역과 학교 등 일부 지역에서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안도 집회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악안을 처리하려 할 때 이를 진지하게 막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들이 직접 피 흘려 얻어낸 민주적 성과를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겨 지켜낼 줄 모른다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떼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런 압박을 받은 민주당이 다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석 점거 등에 나서면서 결국 집시법 개악안 처리가 일단 좌절됐다.

야간집회가 허용되긴 했지만 집회의 자유는 여전히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집시법 개악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재환

왜 언론은 천리안보다 나로호 발사에 열광했나?

지난 6월 27일 한국의 첫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연구자들에게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위성은 2003년부터 개발이 추진돼 왔다.

기상청은 천리안 발사를 통해 위성으로 받는 기상자료 간격이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과 실패한 나로호를 다루는 언론의 관심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나로호 발사 연기와 실패를 방송 3사가 앞다퉈 생중계하고 정치인들까지 얼굴도장을 찍으려고 발사장을 다녀간 것과 달리, 천리안은 두 차례의 발사 연기와 발사 성공 모두 단신으로 처리됐다.

나로호가 “우리 기술”이고 천리안은 “외국산”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천리안 역시 통신 중계기 등에는 “우리 기술”이 포함돼 있으며, 무엇보다 연구논문 수에서 천리안(COMS)은 나로호(KSLV)의 갑절이거나 (Google 학술검색), 나로호와 비슷하다 (DBPia).

2008년에 처음 문을 연 국가기상위성센터도 나로호에 탑재된, 이룸도 생소한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가 아니라 바로 천리안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천리안과 나로호 모두 “우리 기술”이라면 언론 관심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국 지배계급의 우선순위다. 지배자들은 “과학강국”을 건설해서 국제사회에 이바지하자고 언제나 떠든다. 그들이 말하는 “과학강국”의 진실은, 제국주의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우위를 다른 나라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발사 성공의 성과가 주변국들에게 모두 돌아가는 천리안과 달리 (기상위성은 수신 자료가 무상 공개된다. 한국도 천리안 발사 전까지는 일본과 미국의 기상위성 자료를 사용해왔다), 오로지 한국에게만 발사 성공의 영예를 안겨주고 주변국들을 긴장시킬 나로호가 중요했던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은 우주에서 지구의 신화를 파악하는 진짜 ‘우주 기술’보다는 우주가 아닌 지구에 붙어 있는 목표물을 파괴하는 미사일 개발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원격탐지센서가 핵심 기술인 천리안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큰 나로호에 더 관심을

보였다.

물론 그 어떤 정부 인사나 언론도 나로호 개발이 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진짜 인공위성도 미사일 발사라고 덮어씌우는 한반도 정세 때문에 그런 표현은 금기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나로호가 기후변화 연구용이라고 떠들었는데 이는 명백하고도 조야한 거짓말이다.

왜곡

정말로 나로호가 기후변화 연구용이었다면, 나로호 발사 한 달쯤 전에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열린 기상학회에서 나로호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물론(오히려 그 자리는 ‘천리안’이라는 명칭을 연구자들에게 발표하는 자리였다), 수 년 동안 위성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 중 과학기술위성 2호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천리안에 대한 논의는 기상학회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 왔다.

천리안과 나로호 발사를 둘러싼 국내 언론의 왜곡과 편파적 관심은, 전쟁과 지진으로 신음하는 아프가니스탄과 아이티에 구호물자보다는 군대를 더 많이 보내야 한다고 보도했던 태도와 유사하다.

그 뒤에는 진정한 우주 개발이나 “국제사회 기여”보다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데 혈안인 한국 지배계급의 야심이 있다.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나로호 발사를 계속해야 하는가

수많은 나로호 발사 예찬에서 보듯이, 정부는 우리가 나로호 발사에 열광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할까?

나로호 발사 홍보 문구에는 나로호가 발사되면 한국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노벨 우주발사상이라도 탈 것 같은 말 밖에 없다. 그러나 나로호에 관련된 각종 미사여구를 건어내고 나로호 발사의 본질을 살펴보면 전혀 색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나로호 발사 홍보 문구에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무장한 국민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일까? 옛 동구권 국가에서는 관료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다. 한국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아도 ‘민족 중흥’을 위해 꼭 참고 일해야 했다.

지배자들이 ‘우리’나 ‘민족’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목적을 가리고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선전 포고하고 노동자들이 죽는다. 이것을 나로호에 빗대보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세금 내고 자본가들이 로켓 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부터 나로호 개발에만 약 5천 25억 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건립에 3천3백14억 원, 나로호에 탑재되는 과학 기술위성 2호 두 대 개발에 1백36억 5천 만 원 등 약 1조 원이 쓰였다. 정부는 이를 공중에 날려 버린 것에 대한 반성은 없이 또다시 ‘우리의 이익과 과학 주권을 위해’ 3차 발사를 준비하겠다고 한다.

이중잣대

‘우주발사체 기술보유국 진입 및 자주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의 겹질을 벗겨보자.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 (혹은 북한에서 주장하듯이 과학기술로켓)을 발사했을 때 <조선일보> 등은 로켓 발사 기술이나 미사일 발사 기술이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북한이 로켓 혹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는 ‘동북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북한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행위가 그렇게 불순하다면 같은 논리를 한국에 적용시키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나로호에 과학 위성이 실리면 과학 로켓이고 폭탄이 실리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면 경제적 이득이 막대하다는데, 경제적 이득이 막대한지는 차치하고라도 그 경제적 이득이 과연 누구의 이득인지는 살펴봐야 한다.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것은 분명한 일이다. 로켓 판매를 해도 그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아닌 정부와 기업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는 복지예산은 줄이고 4대강 사업은 확장하는 정부이므로 세계 위성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복지만 줄어드는 결과를 낼 것이다.

나로호 발사에 1조 원을 쓰지 말고 무상 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에 돌리는 것이 진정 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길이다.

한영민



강이주

누구를 위한 발사인가?

나로호와 방위산업체의 이해관계

나로호 발사는 많은 나라들이 우주산업에 앞다뒹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측면이 강하다.

실제 2007년 2천5백10억 달러(약 3백조) 규모이던 우주산업 시장규모가 올해 5천억 달러(6백조)로 커졌다.

나로호 프로젝트는 우주센터 건립과 발사체 개발에 1백6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거대 프로젝트였다.

나로호는 대기업의 방위산업체가 만든 첨단 무기산업의 집합체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현대중공업의 발사대(발사체 기립장치), 두산 DST의 관성항법 유도장치, 한화의 고체연료와 추진체, 삼성 테크윈의 추진체 터보 펌프 등 국내 대기업이 이끄는 방위산업체가 참여했다.

이처럼 나로호는 2000년대에 들어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방위산업체 성장과 밀접하게 관계있다.

이명박은 취임 직후 용인 3군 사령부를 방문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방도 경제고 이제 돈 쓰는 국방에서 돈 버는 국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돈 버는 국방

남한의 방위산업체 성장은 국가자본주의의 성장의 토대를 다졌던 1970년대에 시작됐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면서 아시아 우방국들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인 대외정책을 전면 수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1969년 7월에 발표한 닉슨의 ‘괘’ 선언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 같은 군사적 개입은 피하고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대처하라는 이른바 ‘자주 국방’의 논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경제 성장에 걸맞는 군사력의 위상을 높일 필요를 느낀 지배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북한과의 긴장을 빌미로 국방비 지출을 매년 늘렸다.

1970년 당시 겨우 소총과 화포 정도

만 생산했던 방위산업체가 현재 세계 17위 규모의 방위산업수출업체로 거듭났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해 2백10억 달러(약 25조 원)로 세계 8위였다.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도 6억 6백만 달러(약 7천4백억 원)로 국방비의 4.7퍼센트에 해당한다. 이명박은 방위산업체 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세계 8위권 안으로 진입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로호 발사는 우주를 향해 쓰는 ‘희망의 우주선’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희생시키면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제국주의 질서에서 아류 제국주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해 온 지배자들의 야심이 녹아 들어간 결과물이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 쓰이는 군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군사적 적대관계를 통해 세계 제국주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강대국들의 시도가 좌절돼야 한다.

강이주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2004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한 ‘무상의료’ 운동이 “정부, 사용자에게만 재정을 더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떠밀어 버리는 당위적 활동에 머물러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으로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무상의료 1단계를 ‘모든 비보험 항목의 보험적용’ 그리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저소득층 10퍼센트의 무상의료’와 ‘미취학아동의 무상의료’로 제시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계산에 따르면 이는 3조 원이면 가능하고, 기업과 국가가 60퍼센트 부담하면 노동자와 서민의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시행 가능한 것이었다.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펼친 무상의료 운동은 성과도 있었다. 실제로 2005년 4월 정부는 “암 등 고액 중증환



2005년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출범식

자 진료비를 줄이는 데 건강보험재정 집중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암 환자 본인의 부담을 15퍼센트 줄였다.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인 우리 나라에서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히 있다.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지 않아

도 말이다.

국가와 기업이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럴 때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목표로 하는 무상의료도 실현할 수 있다.

신명희

〈레프트21〉 거리 판매에 함께합시다

저는 다함께 신입회원입니다.

제가 다함께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건 재작년 촛불 때였지만,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건 올해 4월 홍대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신문을 구입하면서였습니다.

그전에도 신문을 자주 구입하기는 했지만, 가판에 있던 다함께 회원이 저에게 포럼을 권했고 저도 흔쾌히 포럼에 갔습니다.

포럼도 좋았지만 다함께 회원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토론에서 저는 공통점과 순수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노동절 집회, 전교조 집회, 공무원 집회, 5·18광주 집회 등 여러 집회와 다함께에서 주최하는 포럼 등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게 무엇이나고 물으신다면 저는

감옥에서 온 편지

〈레프트21〉 동지들께

저는 지난해 쌍용차 점거파업으로 구속된 이용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 6일 공장에서 나왔는데 곧바로 수배가 됐고 올 5월 20일 체포돼 지금은 평택구치소에 있습니다.

보내 주시는 〈레프트21〉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투쟁, 경제 관련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출소하기 전까지 계속 보내 주십시오.

단결과 연대, 노동해방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레프트21〉이 되시기를...

2010년 6월 23일

평택 구치소에서 이용덕 드림

동지들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취재와 집필활동을 계속하실 동지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신문을 받아 들고 투쟁하는 민중의 동지적 정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세심함에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답장을 바로 보내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 중입니다.

부당한 억압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삭이며 그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총칼을 갈고 있습니다.

저는 7월 8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권력이라면 무죄겠으나, 개편 상실의 권력이라... 이번에도 모두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범주가 아니라면 선고 받고 사회로 나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민중의 투쟁, 그 승리의 역사를 믿고 함께 끈질기게 싸우기로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0년 6월 18일

김현웅 2008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한민호

2010년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정치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선거

민주노동당 4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선거가 진행중이다.

4기 지도부의 임기중에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다. 그래서 출마자들이 제시하는 전망이 관심이다.

반MB 진보연합과 반MB 진보연합의 문제가 선거 쟁점이다.

물론 후보들 사이에 민주연합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후보들이 민주연합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들(이정희·김승교·김성진 후보)은 2012년 대선에서 민주연합을 통한 연립정부 수립 전향도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래서 민주연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논쟁이 되지 않는다.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어떻게 민주연합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크게 봐 민주노동당 강화를 통한 민주연합(물론 이들도 말로는 진보연합을 말한다)이나 진보연합을 통한 민주연합이냐로 나뉜다.

이정희·장원섭·우위영·이영순·김승교 후보가 전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정희 후보는 후보 토론회에서 진보연합이 '당의 공식결정'이므로 당연히 추진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우리 정치의 미래이며", "민주노동당이 중심에 서야 하고 ... 민주노동당이 빨리 강화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선을 철저히 견지하고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아래로부터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진보정당이 들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 복원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노총 내에서 커다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언론 인터뷰에서 "진보정당 재통합이 1차적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정희

후보의 전망이 민주노동당 강화를 통한 민주연합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장원섭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대연합이 부분적이었는데도 큰 성과를 냈다. 우리 자체 역량을 강화하면 부분적 성과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후보는 '일사분란한 당 조직'을 강조한다. 당내 이견에 대한 단속을 시사하는 듯해 쟁점이다.

전망

반대로, 김성진·정성희·최은민 후보는 진보연합을 통한 민주연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김해영 후보는 진보연합을 상대

적으로 강조하지만, 민주연합을 일관되게 비판하지는 않는 듯하다).

이 후보들은 앞서 언급한 후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연합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민주연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진보연합을 해하면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는 민주연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구상에 따르면 진보연합이 잘 될수록 민주연합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만으로는 안 된다는 현실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아닌 세

력들에게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을 직시하는 인식과 함께, 진보만으로

는 2012년 반MB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

진보연합을 선거적 수단 위주로만 사고하는 듯하다. 물론 선거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선거 판이 주류 부르주아 정당들의 한심한 말싸움터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선거에 대응하는 것은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이 아닌 진보적 정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일컬어 진보진영이 단결해 진보연합을 이뤄 놓고는 선거에서 민주당과 연합한다면 이런 정치적 기획이 실종될 것이다.

이름바 민주노동당 내 '진보연합파'로 불리는 이 후보들이 천착하지 못하는 부

분이다. 인전에서 선거적 성공을 위해 최종 진보연합을 회생시킨 것도 그래서다.

안타깝게도, 이번 민주노동당 당직선거는 민주연합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느냐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듯하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지도부의 구상대로 정치 현실이 굴러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좌파는 민주노동당 새 지도부의 민주연합 프로젝트를 비판할 뿐 아니라 진보적 정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일컬어 진보진영이 단결해 진보연합을 이뤄 놓고는 선거에서 민주당과 연합한다면 이런 정치적 기획이 실종될 것이다.

이름바 민주노동당 내 '진보연합파'로 불리는 이 후보들이 천착하지 못하는 부

김재현 민주노동당 총로위원장



민주노동당 4기 최고위원 후보들 민주노동당 지도부 선거의 주된 쟁점은 민주연합으로 기가 위헌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다.

진보정당은 지방정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정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하자 진보적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둘러싼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인천 남동구, 동구,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민주노동당은 울산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잘 살려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출신의 울산 구청장들이 주류 정당 출신의 구청장과 다르다는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 준 것은 중앙정부가 맞서 싸운 때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려 싸웠을 때 그 활약은 눈부셨다.

반면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했던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경우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런 실패들이 쌓여 결국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자리를 내주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토니 클리프는 1920년대 영국에서 벌어진 포퓰러 운동을 사례로 들며, 진보정당이 지방정부를 활용해 운동의 구심점 구

실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노동당의 역사, 책갈피) "지방정부는 [의회와 달리] 단순한 연단 이상이 될 수 있다. '무장 집단'을 동원해 지 끝에 채택됐다. "포퓰러 구의원들은 투쟁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 투쟁을 지도했다."

1919년 영국 노동당은 런던 노동계급 거주지인 포퓰러 구의회에서 처음으로 다수파가 됐다. 이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 온 조지 램즈버리는 노동당이 장악한 구청의 목표물을 이렇게 요약했다. "노동당 지방정부가 자본가 정당의 지방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빈민을 구제해야 한다."

그러나 런던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포퓰러 구에서 실패 급여 등이 쌓여 결국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자리를 내주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로이드조지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포퓰러 구청은 삼급 기관인

런던 시와 경찰, 구호시설, 구청에 저당해 야 하는 고부금을 빈민 구제 사업에 써버렸다. 법을 어겨서라도 싸우자는 제안이 지역 노동조합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끝에 채택됐다. "포퓰러 구의원들은 투쟁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 투쟁을 지도했다."

1921년 9월 이 '불법' 투쟁을 주도한 구의원 30명이 구속되지만 포퓰러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여성 구의원 여섯 명이 감옥으로 이송될 때 1만 명이 그 뒤를 따라 행진했고 세입자방어연맹에 수천 명이 가입해서 집세와 지방세 파업을 준비했다. 좌파가 다수파인 다른 구의회 두 곳도 포퓰러의 선례를 따라 불법 투쟁을 결의했다. 실패자들의 행진, 빈민구제위원회의 정기 농성, 경찰과의 충돌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6주 동안의 구청 운동 끝에 그들은 석방됐고 마침내 정부가 양보해야 했다. 포퓰러의 유야 사망률은 1918년 1백6명에서 1923년에 60명으로 줄었다.

임명직과 공동지방정부 문제

그러나 강병기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이나 김미희 전 성남시의원처럼 참여정부

인사나 민주당이 당선한 지방정부에 임명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위상을 높이기에는커녕 그 반대로 끝날 공산이 크다.

선거에서 지지를 받아 당선한 경우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연단을 활용해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선전·선동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에 대한 지지를 이용해 중앙정부, 지방의 회, 지역의 기독교 세력들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지방정부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려면 이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임명직으로 지방정부에 참여해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먼저 민주당의 복지 공약이 노동자들과 파업을 벌이거나 급진적인 복지 정책을 펼칠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을 주도할 구의원 30명이 구속되지만 포퓰러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여성 구의원 여섯 명이 감옥으로 이송될 때 1만 명이 그 뒤를 따라 행진했고 세입자방어연맹에 수천 명이 가입해서 집세와 지방세 파업을 준비했다. 좌파가 다수파인 다른 구의회 두 곳도 포퓰러의 선례를 따라 불법 투쟁을 결의했다. 실패자들의 행진, 빈민구제위원회의 정기 농성, 경찰과의 충돌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6주 동안의 구청 운동 끝에 그들은 석방됐고 마침내 정부가 양보해야 했다. 포퓰러의 유야 사망률은 1918년 1백6명에서 1923년에 60명으로 줄었다.

임명직과 공동지방정부 문제

그러나 강병기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이나 김미희 전 성남시의원처럼 참여정부

급에 주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정당 출신의 부도지사가 제공하는 개혁은 대중을 만족시키지도 못하는데다 설명 그것이지 이뤄진다 해도 개혁의 성과는 모두 도지사인 김두관에게 차지할 것이다.

예컨대 강병기 전 최고위원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현행법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제 공하는 복지가 민주노동당 '덕분'이라는 평가를 받을 여지가 거의 없다.

최악의 경우 진보정당은 '공동지방정부'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과 함께 져야 할 것이고, 반기를 들면 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과 임명권을 가진 민주당에게 쫓겨날 것이다.

물론 앞서 지적인 지방정부의 특성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도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중앙정부를 장악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런 개혁조차 일관되고 진지하게 밀어붙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현재의 행정체제와 법 질서를 뛰어넘는 운동을 지도할 수 없다. 진보정당들과 달리 민주당은 지배계

정호중

진보신당은 어떤 ‘연합 정치’를 추구해야 할까

진보신당의 진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은 9월 5일 임시당대회 때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듯하다.

이 논쟁을 촉발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진보신당은 정치적으로는 안티 노무현, 조직적으로는 안티 민주노동당으로 출발했는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한다.

사실 2007년 대선 직후 민주노동당에서 분리해 나와 진보신당의 창당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문제의식에는 합리적 핵심이 있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 실패와 배신을 회멸을 느끼지만, 여전히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문제는 방

식이었다.

진보정당이 노무현 정부와 차별되는 급진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진보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또 북한 체제와 그 지배자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필요했고,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나 비정규직 연대 의면도 비판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분당의 주도자들은 민주노동당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선거적 기반을 확대하려 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식 정치가 우경화하는 분위기다.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친 듯하

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종북주의"라고 비난하고 '민주노총당', '데모당' 이미지

를 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끝내 분열을 택했다.

물론 민주노동당 자주파의 경직되고 패권적인 태도가 이런 분열을 더 부추기는 구실을 한 것도 사실이다.

분당 이후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을 "넓은 진보"로 규정하며 추진한 '진보의 재구성'은 2008년 촛불 시위 속에서 부분적 성공을 거두는 듯했다. 촛불 속에서 급진화된 사람들 일부가 가입하면서 진보신당은 성장했다.

하지만 분열한 진보정당들이 민주당 왼쪽의 공백을 메우기는 힘들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구나 2009년 노무현 사망 정국을 거치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일부 회

복됐고 국민참여당이 등장해서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심상정 전 대표는 "2년 전 진보신당이 창당했을 때 기대가 많았고 잠재적 지지층이 있었는데, 이 잠재적 지지층을 현실화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 상황에서 분당과, 과거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으로 비춰진 것이 문제였다는 인식이 가져 온 노동조합 기반의 약화는 진보신당의 입지를 더 좁혔다. 노동조합에서 재정과 인력을 총원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이번 지방선거 전부터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다.

"평상시에도 상근자를 둔 지역 당원협의회는 거의 없다.](송영아 진보신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체제와 고립

이 상황에서 심상정 전 대표가 "당이 정체되고 고립되고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논의"를 하자며 "연합 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진보신당이 흔들리거나 홀수로 연합을 추진해야 할 객관적 근거는 없다"(김석연 변호사)거나, 민주노동당을 '종북주의'라고 비방하며 선도 탈당해서 분당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시 '분당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중의 진보정치 단결 열원과 배치될 뿐이다. 진보신당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사회당 정도하고만 연합을 하자는 주장도 연합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잡아 진보정치 세력의 상황 주도력 강화에 큰 도움이 안 될 듯하다.

한편, 심 전 대표의 "확장형 진보연합"은 연합의 범위를 진보진영 밖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듯 하다. 그는 "나의 연합정치 구상은 민주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국민참여당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진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 전 대표는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 유신임을 지지하며 후보 사퇴했다. 부산에서도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했다.

그래서 <데일리>의 정성근 기자는 "민주당이 포함된 범야권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노동자 몇 명이 죽었는데 구여권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가"(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라는 비판은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진보신당에도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한미FTA, 비정규직 약법 등을 추진했고 여전히 "기본적 지향은 맞았다"(천호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는 사람들을 진보로 볼 수는 없다. 적잖은 개혁적 대중이 국민참여당을 지지하지만 그 당의 리더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이들과 연합하려면 불가피하게 진보적 강령을 하향 조정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진보신당이 흔들리거나 홀수로 연합을 추진해야 할 객관적 근거는 없다"(김석연 변호사)거나, 민주노동당을 '종북주의'라고 비방하며 선도 탈당해서 분당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시 '분당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중의 진보정치 단결 열원과 배치될 뿐이다. 진보신당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사회당 정도하고만 연합을 하자는 주장도 연합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잡아 진보정치 세력의 상황 주도력 강화에 큰 도움이 안 될 듯하다.

한편, 심 전 대표의 "확장형 진보연합"은 연합의 범위를 진보진영 밖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듯 하다. 그는 "나의 연합정치 구상은 민주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국민참여당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진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 전 대표는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 유신임을 지지하며 후보 사퇴했다. 부산에서도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했다.

그래서 <데일리>의 정성근 기자는 "민주당이 포함된 범야권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노동자 몇 명이 죽었는데 구여권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가"(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라는 비판은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진보신당에도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한미FTA, 비정규직 약법 등을 추진했고 여전히 "기본적 지향은 맞았다"(천호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는 사람들을 진보로 볼 수는 없다. 적잖은 개혁적 대중이 국민참여당을 지지하지만 그 당의 리더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이들과 연합하려면 불가피하게 진보적 강령을 하향 조정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진보신당이 흔들리거나 홀수로 연합을 추진해야 할 객관적 근거는 없다"(김석연 변호사)거나, 민주노동당을 '종북주의'라고 비방하며 선도 탈당해서 분당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시 '분당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중의 진보정치 단결 열원과 배치될 뿐이다. 진보신당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사회당 정도하고만 연합을 하자는 주장도 연합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잡아 진보정치 세력의 상황 주도력 강화에 큰 도움이 안 될 듯하다.

한편, 심 전 대표의 "확장형 진보연합"은 연합의 범위를 진보진영 밖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듯 하다. 그는 "나의 연합정치 구상은 민주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국민참여당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진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 전 대표는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 유신임을 지지하며 후보 사퇴했다. 부산에서도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했다.

그래서 <데일리>의 정성근 기자는 "민주당이 포함된 범야권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노동자 몇 명이 죽었는데 구여권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가"(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라는 비판은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진보신당에도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한미FTA, 비정규직 약법 등을 추진했고 여전히 "기본적 지향은 맞았다"(천호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는 사람들을 진보로 볼 수는 없다. 적잖은 개혁적 대중이 국민참여당을 지지하지만 그 당의 리더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이들과 연합하려면 불가피하게 진보적 강령을 하향 조정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민주당이 진보진영이 참조할 모델인가

추구해 달이 분열할 때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당 좌파를 포함한 좌파들이 민주당에 흡수되지는 않았기에 1930년대에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세계 대공황의 고통 속에서 노동자 투쟁이 부활한 것이다. 1932년에 '뉴딜'을 내세워 집권한 루스벨트가 복지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노조 결성권과 임금 인상을 허용한 것은 이런 투쟁에 밀려서였다.

그러자, '신'이란 '흑인·여성 노동자들'도 자신감을 얻고 투쟁에 동참했다. 투쟁 속에서 노동계급의 폭넓은 단결이 이뤄졌다.

이런 배경에서 기업주들은 1936년 재선에 나선 루스벨트를 '친노동'이라고 비호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서 6퍼센트를 얻음 즈음, 이 당은 연방 하원의원 두 명과 시장 70명, 지방의원 1천여 명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때 민주당은 노예소유주들의 당에서 시작한 자본가 당이었다.

그러나 사회당 좌파는 미국노동총동맹(AFL) 소속 흑인 숙련 노동자 사이에 퍼진 인종차별 의식과 정치적 실리주의에 진지하게 도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회당 우파가 민주당 대통령 윌슨과 동맹 정책을

관지를 폐간했고 1944년엔 아예 공산당을 해산했다.

공산당이 이렇게 정치·조직상으로 무장해제되자 루스벨트는 손쉽게 탄압으로 돌아서 본래 기반인 기업주들을 달랠고 제2차세계대전을 핑계로 그동안의 양보를 일부 거둬들였다.

신좌파 운동

그 뒤 민주당 정부는 한국전쟁을 벌이며 냉전 매카시즘을 일으켰고 곧이어 베트남전쟁을 시작해 대량학살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미국 좌파와 노동운동은 대안적 진보정당을 만들지 않고 흑인 민권 운동과 베트남전 반대 운동이 폭발한 1960~1970년대의 기회를 날려 버렸다.

이 시기에 신좌파운동이 정치에서 한 일은 1972년 '반전' 후보 맥거번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든 것뿐이다. 이에 민주당 주류는 사실상 공화당 닉슨을 지지했고 맥거번은 참패했다.

이로부터 신좌파운동은 오히려 민주당을 진보정당인 듯 분칠한 것도 모자라 충성을 증명하려고 1938년에는 기



미국 반전운동은 2004년에 부시 낙선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이르러 전쟁 지지자인 존 케리를 지지했다.

이 아니라 대기업주들의 당이었던 것이다. 좌파가 미국 민주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파산했다. 좌파는 민주당 안에서 질적당했다. 독립적 진보정당 없이 대자본가들을 대변하는 두 개의 신자유주의·계급주의 정당만이 존재하는 미국의 암울한 정치 상황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김문성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6월 4일 통계청이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와 이를 분석한 자료들이 보여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레프트21>이 지적해 왔듯이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타격을 받았던 한국 경제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중국 수출 호조 등을 통해 회복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고용을 늘리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정규직은 2007년 3월 이후 1백39만 명이 증가해 2010년 3월 8백33만 명이 됐는데 특히 2009년 3월 이후 67만 명이 늘었다. 비정규직은 2007년 3월 8백78만 명에서 2010년 3월 8백28만 명으로 대략 50만 명이 줄었다.

세계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는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지만, 그 후 한국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자 정규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까지 전체 노동자 중 55~56퍼센트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3월 49.8퍼센트까지 떨어져 정규직 비율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이 30퍼센트 정도인 미국·일본 등보다도 여전히 훨씬 높은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떠들었지만, 위기가 한창일 때 단기·저질 일자리로 실업률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만 급급했다. 예를 들어, 공공행정 부문에서 2008년 이후 정규직은 전혀 늘지 않았고, 2009년에는 청년인턴제·희망근로 같은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그쳤다.

게다가 2009년 하반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실패로 끝났지만 말이다.

둘째, 고용이 늘고 있지만 노동계급 내의 격차가 확대됐다.

위기가 닥친 2008년 하반기부터 제조업 비정규직이나 건설업 일용직 등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고,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기업주들은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간제를 줄이고 처지가 더 열악한 시간제와 파견제 등의 고용을 늘렸다.

이는 진보진영이 노무현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법을 비판하며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게 옳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이번 위기 이후 더욱 확대됐다. 경제가 회복하면서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9년 3월 2백53만 원에서 2010년 3월 2백66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비정규직은 1백24만 원에서 1백23만 원으로 하락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급총액은 48.9퍼센트에서 46.2퍼센트로 떨어졌다.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2007년 3월 41.2퍼센트에서 2010년 3월 38.3퍼센트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복합적

셋째, 이번 경제 위기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2009년에만 자영업자가 대략 30만 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1997년 경제 위기로 1998년에 3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이후 최대치다.

1998년에는 노동자 1백10만 명도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번에는 노동자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아 자영업자 중 일부는 노동자가 됐을 공산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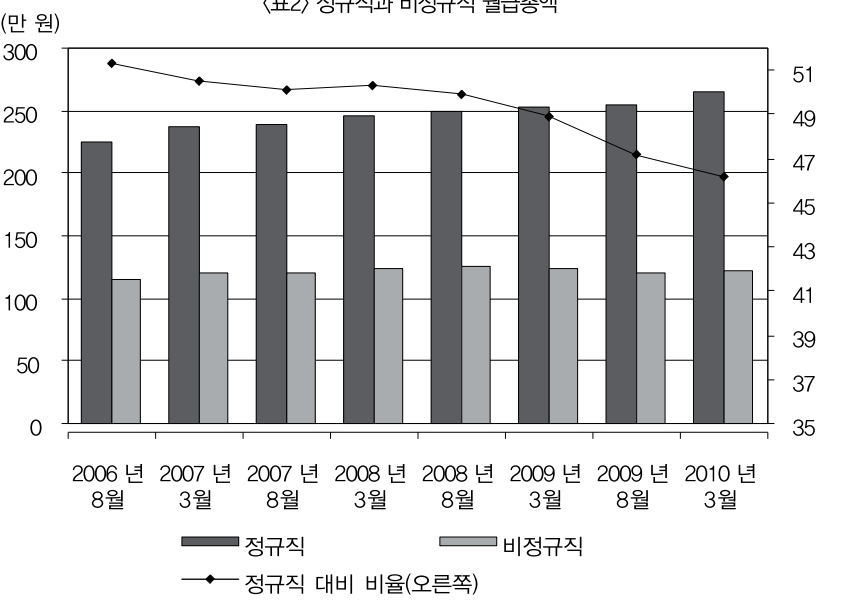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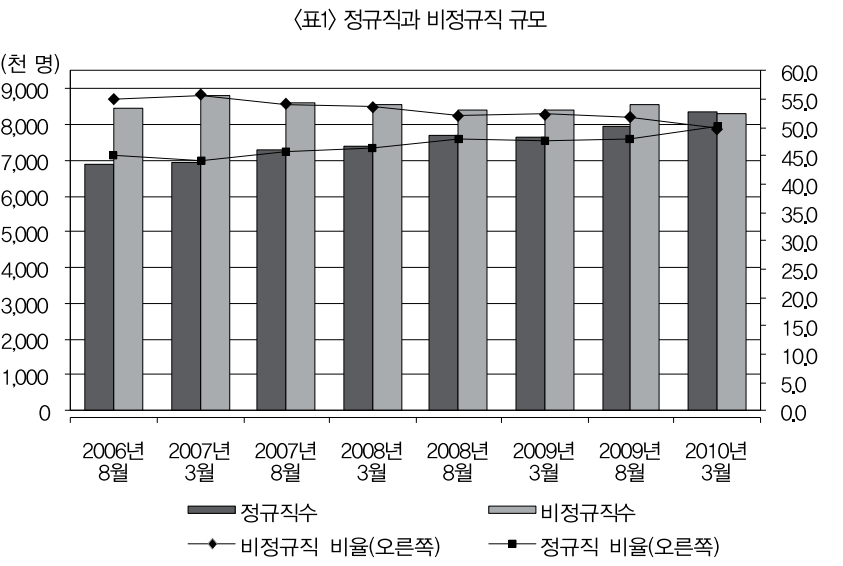
넷째, 노동자 수가 늘어나고 정규직 비중도 늘고 있지만, 실질 실업률도 여전히

높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2010년 5월 비경제활동인구(일자리가 없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40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인 33.5퍼센트에 크게 웃돌았다. 이것은 공식 실업에 잡히지 않는 실업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공식 실업자에다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그냥 쉬었음’,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념자 등 실제로는 실업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는 지난해 1월 3백30만 8천 명에서 올해 1월 3백53만 7천 명으로 23만 명가량 늘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2010년 7월 1일은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맞는 날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기념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처음 도입하기는 했지만 건강보험제도를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 제도로 만들어 낸 것은 고스란히 노동자 운동과 사회운동이었다.

물론 이런 피땀 어린 노력에도 보장성이 아직 낮고 기업과 정부의 기여가 부족한 상태다. 보험료의 누진적 적용 또한 미흡하다.

이런 허점들을 이용해 이명박은 월소득 93만 원을 신고하고 1만 3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평범한 민중이 바라는 의료 ‘선진화’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는 민영화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기틀을 닦았다.

이명박 정권은 더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거론했고, 병원·민영의료보험 간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밀어붙였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으로도 모자라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기려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자격사제도를 개



5월 30일 대학로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반대·건강보험지킴이’ 공동행동 의료민영화=돈 없는 사람은 ‘아프지 말라’는 이명박의 배려?

선한다는 명목으로 병원의 개설기준을 기업에게 확대하는 영리병원 허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착

치료행위 외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고 가격을 자유화하고 환자 관련 정보를 기업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려 한다.

이런 흐름은 6·2 지방선거로 브레이

크가 걸렸다. 특히 현재 영리병원 추진의 핵심 쟁점지인 제주와 인천에서 집권당이 패배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민심을 고려해 새 제주도지사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새 인천시장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23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6월 국회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안건을 통과시켜려 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큰 법률안으로 분류

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자체가 보류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레임덕이 오기 전에 의료를 자본에게 넘기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 듯,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재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특히 20대 취업자만 지난해보다 5만 2천 명 줄어 20대가 느끼는 실업 고통은 여전히 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위기와 그 후 회복이 노동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복합적이다. 여전히 실질 실업자가 매우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는 더 악화했지만, 정규직이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 회복은 재정 적자와 중국의 거품 성장 등에 의존한 매우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할 수 있다. 이미 위기에 직면한 유럽 지역에서는 긴축과 복지 삭감, 공공 부문 노동자 대량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폴 크루그먼은 “제3의 불황이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파업발생건수는 몇 년째 감소하다가 2008년 1백8건에서 2009년에 1백21건으로 조금 반등했다. 부당하고 구제신청은 2007년에는 6천2백92건, 2008년에는 8천3백43건으로 급증했다.

이것은 조직 노동자들이 경기 회복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며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조짐을 보여 주는 듯하다. 또,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부당하고 구제신청과 같은 개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된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고 경기 회복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노동계급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불안정한 경기 회복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노조법 개악으로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고용유연성과 파견 근로 사유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계속 고통전가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단결력과 투쟁력을 강화하며 ‘더블딕’ 위험과 고통전가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강동훈

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조기 가시화”를 향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방안 마련’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도 현안 과제로 명시했다.

윤증현은 영리병원 전도사처럼 월드컵이 한창이던 6월 18일 <머니투데이> 창간 기념 조찬강연에서 “2008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마무리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24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는 “멀게 느껴지지만 아직 군불을 털 지퍼서 그런 것...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간 뜬이 들 것”이라며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을 보여 줬다.

의료민영화 문제는 4대강 문제와 함께 하반기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듯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

최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89.4퍼센트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될 것이고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진보진영과 보건의료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선 전선에서 단단히 결속을 유지해야 한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쌍용차 매각 기도

공기업화가 대안이다



사진 제공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6월 9일 쌍용차 점거파업 1주년 집회 고용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르노닛산과 인도의 마힌드라 등 6개 기업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 사회단체들은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쌍용차 제2의 줄속 매각 저지 대책위’를 결성했다.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 사이에선 쌍용차의 새로운 인수자가 일자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매각이 이런 노동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2004년 상하이차는 고용 보장을 약속하는 공증까지 썼지만 결국 노동자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매각 자체가 구조조정으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책위는 쌍용차 매각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고용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금속노조 담당자가 ‘매각 반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대책위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어떤 기업이 인수해도 노동자들의 처지는 마찬가지”라며 대안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노주의 노동자연합 등의 단체들은 지난해 제시했던 모호한 국유화 입장조차 뒤로 미룬 채 생존권 투쟁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매각에 대한 분명하고 올바른 대안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지지와 연대를 확대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쌍용차는 지금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

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일시적 공기업 상태다. 그래서 정부는 고용 보장에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든 매각하려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려면 일시적 상태의 공기업화가 아니라 진정한 공기업화가 필요하다.

물론, 정부가 일부 공기업조차 민영화하려는 마당에, 공기업화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현실에서 국가가 특별히 개혁적이지도 않고,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구실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부도기업 공기업화

그러나 국가는 그 본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거나 선거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회복지지를 마련하거나 하는 등의 공적 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강제력과 정당성을 가진 기구다.

실제로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중의 반란에 밀려 민간에 팔아넘긴 기업들을 다시 회수하곤 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사기업을 공기업화 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경제를 회복시킬 대안으로 국가의 대규모 보조와 공기업화를 추진했다.

영국의 애들리 정부는 은행·석탄·가스·전력·교통 산업을 공기업화했다. 정부는 이 산업들을 모두 공기업화하는 법령까지 제정했다. 당시의 공기업화 정책은 기업 운영이나 방향에서 그 어떤 진보적 가치도 실현하지 못했지만, 고용을 보장하는 효과는 분명

했다. 공기업화는 경제활동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백만~3백만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우파 정부 드 골 정부도 나치 점령군에 부역했던 르노자동차 사장으로부터 기업을 회수해 공기업화했다. 1970년을 전후로 한 경기 침체 속에서 미테랑 정부는 공공지출 확대와 공공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획을 추진했다.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 속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진보정당과 운동 단체들이 공기업화를 운동의 요구로 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공기업화 요구는 국가에 도전하게 하며, 투쟁의 급진적 발전을 꾀할 ‘행동강령’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 요구가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현상이라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자본가 계급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볼리비아 모랄레스 정권에서 진행된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의 공기업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운동의 압력과 계급투쟁의 발전은 대안적 경제 모델을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게 할 수도 있다.

경제 위기 시기에 국가의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투쟁 요구다. 쌍용차 운영의 실질적 권한이 정부에 있는 마당에, 정부가 고용 보장의 책임을 회피하고 쌍용차를 매각하게 게 놔두서는 안 된다.

박설

여성해방 ③

언어와 여성 차별

언어는 현대의 많은 사회 이론들이 그러하듯 페미니스트들의 주요 관심사다. 페미니스트들이 언어에 주목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생각 또는 경험이 깔려 있다. 바로 언어가 여성 차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여성 차별적 언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쭈쭈뽕뽕’ ‘꿀벅지’ ‘쭈뽕녀’ ‘하자녀’같이 여성의 신체를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외모를 이유로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대중매체에서 흔히 사용된다. ‘밥순이’ ‘부엌데기’처럼 여성의 가사노동을 폄하하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도 있다. ‘처녀작’ ‘처녀 출항’처럼 순결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단어들도 있다. 성폭행범을 ‘빨간 모자’ ‘발바리’ ‘산 다람쥐’같이 귀여운 속칭으로 부르는 것도 여성 차별적이다.

여성 비하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여성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표현도 많다. ‘퐁차 빨리 치워야 새 차가 지나가지’(친척들이 동생 앞에서 결혼하지 않은 언니를 가리켜), ‘뽕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뽕새가 여성, 황새가 남성을 가리킬 경우) ‘아직도 (회사) 다녀?’(과장이 임신하거나 나이는 여직원에게 말할 때) 등.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언어가 하도 많아서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여성단체들이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성차별적 언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도 일부 포함되기도 하지만, 무지하게 많은 성 차별 언어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언어 개혁

이런 현실 때문에 언어 개혁이 이따금 화두로 떠오르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공기관이나 언론사에 차별적이지 않은 언어 사용을 촉구하거나 심지어 행정 조치를 국가에 요구할 수도 있고,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여성주의 언어’를 확산하는 것을 꾀할 수도 있다.

평등과 해방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성 차별적이지 않은 언어 사용의 필요성에 마땅히 공감해야 한다. 성 차별적 언어는 여성의 자긍심을 짓밟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시각을 강화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 평등한 언어 사용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는 종종 생경한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미혼’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을 ‘성 차별’로 비판한다.

주장인즉슨,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말로,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관념이 전제돼 있다. 반면, ‘비혼’은 결혼 대신 대안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비혼’을 쓰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그러나 ‘미혼’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는 생각은 과도하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미혼’이 꼭 그런 의미를 담고 사용되지는 않는다.

‘비혼’이라는 단어를 배타적으로 고집하는 경향에는 언어의 힘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 라이프스타일 정치가 깔려 있다. ‘정치적으로 올바름’ 언어 사용을

통해 여성 차별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과 결혼 거부 같은 대안적 라이프스타일 추구를 통해 해방을 이룬다는 관념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언어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는 생각은 페미니스트들이 흔히 받아들이는 생각인데, ‘가부장적 사회’에서 언어를 ‘남성 지배’의 기제로 보고 ‘남성 중심적 언어 해체’를 중요한 실천으로 여기는 페미니스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주로 학술적 페미니스트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언어 전반을 남성이 만들고 통제한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일부 남성(본질적으로 지배계급 남성)들은 언어의 일부 측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모든 남성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언어의 본질은 인간의 실천 — 비록 종속적 구실일지라도 여성, 어린이, 흑인, 유대인 등의 사회적 실천을 포함한다 — 을 통해 역사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한편, 언어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물론 언어는 의식 형성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언어를 둘러싸고 이데올로기 투쟁이 벌어지는 까닭이다.

그러나 사회적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단지 언어이거나 주로 언어인 것도 아니다. 사회적 존재(환경과 인간의 신체적·심리적 필요, 사회적 관계의 복합)와 인간 사고와 언어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호관계에서 사회적 존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개방적 성 의식의 확산은 단순히 지식인들이 긍정적 성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결과가 아니라 여성의 유급 고용과 교육 기회 확대, 피임과 낙태술의 발전으로 낡은 성 관념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의 성장은 여성의 자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촉진하는 구실을 했다.

언어의 발전은 사회의 근원에 있는 모순과 충돌을 반영하는 사회의 발전에 매여 있다. 따라서 부정적 이미지의 언어를 긍정적 이미지나 중립적 의미를 담은 언어로 바꾼다 해도 만약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이름이나 서술은 곧 옛 의미와 함축을 띠게 된다.

이를테면 ‘매춘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부르게 됐다 해서(심지어 ‘성노동자’로 부르다 해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가사노동’을 ‘돌봄노동’으로 부르다고 해서 이윤 중심이고 성 차별적인 사회에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하는 관념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성 차별 언어를 바꾸는 것은 여성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대규모 투쟁이 뒷받침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에서 ‘깜둥이’를 ‘흑인’으로 바꾼 것은 1960년대 대규모 민권투쟁이 미국 사회를 뒤흔든 결과였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과 여성운동의 성장 덕분에 공식 언어가 개선됐다. 1998년 ‘결손가정’이 ‘한부모가정’으로, 2004년 ‘윤락녀’가 ‘성매매 여성’으로 바뀌었다.

물론 성 차별 언어는 여전히 만연하다. 그러나 여성 차별적 현실에 맞서는 투쟁이 크게 성장하면 사람들의 의식은 바뀌고 개인들의 언어 사용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대중이 착취와 여성 천대 모두에 맞서는 사회혁명을 시작한다면, 여성 차별적 언어도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정진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노련 탄압은 촛불시위가 잦아들던 2008년 8월 말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해 8월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직후 ‘법집서와 사회 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사노련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처벌이 다름 아닌 사상 재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담당 검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자들이 (이런 사상에) 이끌릴 수 있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 환경 파괴, 전쟁으로 빠져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꿈꾸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피고측 증인으로 나선 김수행 교수도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법으로 차단하려는 시대착오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사노련 활동가들은 현재 법정에서 모두 진술 등을 통해 사회주의의 대의와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사노련 활동가들이 2008년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묵비 원칙에서 벗어나 부분진술을 하고,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재판에서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법정투쟁을 벌이며 사회주의의 대의를 옹호하길 기대한다.

탄압받은 8명의 활동가들 중 3명은 사노련의 조직 분열 때문에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로 옮겨가 있지만 탄압에 맞선 대응에서 만큼은 흔들림 없이 일치단결해야 할 것이다.

정중남

중국 노동자 투쟁

신세대 노동계급 운동의 탄생

5월 중순부터 시작된 중국 남부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 세계 언론에서 유달리 큰 관심을 끌었다. 처음에 나는 약간 당황했다. 중국 노동자 파업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2008년 어용노조 고위 관료가 “파업은 부부 싸움처럼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

또, 관영 신화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요망〉은 2009년 12월 14일지에서 실린 기사 ‘노동자와 자본가 모순 우려’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모순은 중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순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 중에는 근거 없이 황당한 것도 있었다. 중국 지방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기업들도 임금을 올리면서 공산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싸지고 전 세계적 물가 상승이 발생할 거란 주장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경제 칼럼니스트 팀 홀란드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 개별 제조업체들의 봉급 인상은 중국의 전체 경제 파이에서 노동자 임금이 차지하는 몫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약간 교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임금은 상승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산성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그 결과, 제조업체들의 단위당 노동비는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보면, 대다수 제조업체들의 임금 비용은 생산 가치의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최근 중국 공장 임금 인상은 별로 난리를 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럼, 새로운 중국 노동자 운동에 관한 언론의 얘기는 호들갑이었을 뿐인가? 그렇지 않다.

협상력

첫째, 이번 파업은 경제적 파장이 큰 자동차 산업에서 벌어졌다. 일본 2위 자동차 기업의 중국 내 생산이 거의 완전 중단됐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도요타의 중국 생산라인도 타격을 입었다.

이들 기업들이 자랑하는 이른바 ‘저스트 인 타임’(적시) 생산방식은 재고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방대한 생산망의 한 지점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생산과정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점이 중국의 혼다와 도요타 부품 공장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협상력을 부여했다. 특히 혼다 경영진은 혼비백산해서 서둘러 임금 협상을 타결하려 했다.

물론 파업 작업장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자가 많은 혼다 록에서 경영진은 파업 파괴자를 고용하겠다는 위협을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매일 2천5백 대의 자동차 생산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혼다 록 경영진도 일정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예전의 열악한 노동집약적 공장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이나 관리자의 폭력 사용, 무차별 해고에 반대하는 투쟁과 비교하면 훨씬 공세적이었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둘째, 이런 자신감은 다른 한편 중국 신세대 노동계급 — 특히 신세대 농민공 — 의 계급의식 고양 과정을 잘 보여 줬



“우리는 먹고살아야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한다” 농민공들이 열악한 임금 수준과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하는 호구제를 규탄하고 있다

다. 아이러니이지만 지금 이 점의 중요성 — 또는 위험성 — 을 가장 잘 깨달은 조직은 어용노조다. 그들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점은 “신세대 농민공 문제 연구”라는 그들의 매우 유용한 보고서에 반영돼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17세에서 26세의 이른바 “신세대 농민공”의 수는 전체 농민공 수 — 최근 중국 정부의 발표로는 약 2억 1천만 명 — 의 절반인 1억 명에 이른다. 흔히 중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전체 노동자 집단이 아니라 이들의 일손이 부족한 것을 지칭한다.

보고서는 이들의 정체성이 이전 농민공 세대와 크게 다른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더는 농민적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호구만 농촌으로 분류돼 있을 뿐이다. 그중 90퍼센트는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대다수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랐다.

사실, 부모 세대의 농민공들도 객관적으로는 농민이라기보다는 소득의 대부분을 임금노동으로 얻는다는 점에서 노동자였다. 다만 그들은 언제나 농촌으로 돌아가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로서의 생활과 의식 사이에 상당히 큰 괴리가 있었다. 이 때문에 종종 그들은 명백한 불의를 겪었을 때 수동적으로 감내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인용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신세대 농민공들은 도시를 자기 터전으로 여기며 중국의 고도성장을 경험하면서 기대 수준이 높고 성장의 열매를 자신도 향유하고 싶어 한다. 그들 중 60퍼센트가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고 도시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게 임금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당연히 그들은 언제나 농촌으로 돌아가 갈 날을 생각하며 저임금과 사장의 만행을 참을 가능성이 더 낮다. 이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집단적 항의로 해결하겠다고 답한 이가 45.5퍼센트였다. 이것은 이전 세대 농민공(17퍼센트)보다 거의 세 배쯤 가깝게 높은 것이다.

이것은 보고서가 결론에서 신세대 농민공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에 “중국 사회의 안정이 달려 있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 준다.

셋째, 이런 신세대 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파업 노동자들은 독립 노조 건설을 시도했다. 혼다 록에서는 노골적으로 이것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고 포산의 혼다 부품 공장에서도 민주적으로 협상 대표를 선출하면서 사실상 어용노조를 배제했다.

물론, 독립 노조 건설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반일 시위 당시 광둥성의 한 공장 노동자들은 파업 과정에서 독립 노조 건설을 시도했다. 지난해에도 지린성의 한 직물 공장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독립 노조 설립을 요청했다 거절당했다.

혼다 사례의 다른 점은 노동자들의 힘과 조직력 때문에 그 시도가 거의 성공할 뻔한 점이다. 정부는 최소한 어용 노조 지부 대표를 자유롭게 선출할 권리를 허용하는 식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일부 해외 언론은 중국 정부더러 선제적으로 독립 노조 건설을 허용해 그 과정을 최대한 “탈정치화”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 육박하는 불평등 수준을 볼 때 일단 노동계급의 독립적 움직임을 허용했을 때 중국 자본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도



파업중인 혼다 포산 노동자들

전으로 순식간에 발전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에게 독립 노조 결성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며 이 문제가 연관됐을 때에는 여전히 무자비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게 곤란한 점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일단 세력균형 자체가 1990년대 초 헨안만 항쟁을 무력으로 패배시켰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층 투쟁이 분출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 정부는 일정한 양보 정책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2010년 중국 정부의 사회 지출은 8.5퍼센트로 드디어 한국을 초과했다(OECD 평균은 20퍼센트)다.

정치적 양보도 필요하다. 더구나,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 정부의 가장 큰 부담은 대중의 급진화를 통제할 적절한 중간 고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늘 국지적 저항이 순식간에 대형 항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향촌 지역 선거, 어용 노조의 권한 확대와 노조 지부 확대 등 변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내내 집단 항의와 노동자 투쟁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2005년 10만 건을 돌파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위협이 줄기는커녕 늘어 왔다.

자본 축적과 이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중국 자본주의의 모델을 극단적으로 억압적인 저임금 경제에서 좀더 첨단 기술에 바탕을 둔 고도화된 경제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처럼 광대한 내수와 첨단 기술에 바탕을 둔 대륙 경제로 전환시키려 한다.

사실, 이것은 1970년대 말 ‘4개 현대화’를 내세운 이후 중국 정부의 궁극적 목표였고 이런 전환 없이 중국은 세계적 자본주의 열강의 지위로 등극할 수 없다. 또, 경제 위기 후 중국 자본주의 미래가 단지 불안정한 서방 시장에만 의지해서는 어렵다는 점이 명백해지면서 그 필요는 더 커졌다.

중앙 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위안화 변동성을 확대하고 수출세 환급률을

낮추고 노동법을 개정하는 등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변화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 경제 위기의 여파를 막기 위해 돈을 마구 풀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런 거시적 사고는 눈앞의 자본 축적과 이윤에 매달리는 지방 관료와 사장들, 특히 저임금 직종 사장들의 단기적 사고와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 중앙 정부가 ‘총자본’의 관점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내 지방에서 기업이 도산하고 내 기업이 도산하면 ‘말짱 도루묵’일 테니 말이다.

중앙 정부는 종종 노동자를 포함해 기층의 움직임을 지방에 중앙 정책을 관철하는 계기로 활용해 왔다. 6월 초 원자바오가 농민공의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에는 언제나 큰 정치적 부담이 뒤따른다. 기층 노동자와 민중이 중앙 정부의 권위를 빌어 더 많은 투쟁을 벌이도록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구체제와 혁명〉에서 불량한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개혁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물론, 중국 정부는 프랑스 봉건 왕조보다 훨씬 강력하다. 오히려, 세계적 경제 위기의 여파도 다른 나라 지배자보다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앞서 말한 모순에 덧붙여 TV 드라마의 풍자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중국 내 부동산 거품,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교체, 세계적 더블딕 위험 등등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 바람은, 중국 노동계급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좀더 공정한 분배와 노동조건을 따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국식 자본주의의 모델에 도전하는 급진적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 노동계급의 바람이 돼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루하고 고통스런 경제 위기 속에서 ‘밀바닥’을 향한 경주’를 계속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용욱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7월 12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기아차

파업을 결의한 기아차 노동자들

기아차 노동자들이 6월 24~25일 실시된 찬반투표에서 71.6퍼센트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특히 화성공장의 핵심인 조립 1·2·3공장에선 찬성률이 80퍼센트가 넘었다. 사측은 그동안 홍보물 수십 종을 발행하며 파업을 막으려고 안간 힘을 써 왔다. 7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는 물론 대의원들에게까지 노조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예 공장에 상주하며 노조를 감시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합원들이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선택한 것은 고무적이다.

물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기아차지부 21대 집행부는 그동안 조합원을 조직하는 데 한신적이었다. 김성락 지부장은 지금까지 전국 공장들을 순회하며 파업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다소 부족함도 있었다. 지부는 매년 진행하던 임·단협 출정식도 하지 않았고, 찬반투표 때에도 라인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대의원들과 선진적 활동가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명박의 만행이 운영하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다스지회가 사측과 노동부의 전임자 문제 합의위반에 맞서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더구나 금속노조가 기아차지부와 함께 투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파업을 뒤로 미루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것은 기아차지부의 고립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을 믿고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하며 파업에 나서야 한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교사·공무원 징계

기세가 꺾인 교사·공무원 징계 시도

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중징계하려는 정부 방침이 갈수록 기세가 꺾이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농성·1인 시위·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가정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징계대상자임을 알린 교사들은 학부모·학생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

여론의 압력 때문에 16개 시도 교육청들은 모두 징계위 개최를 연기했고, 일부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조차 중징계 추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시도 용산구청과 성동구청이 제출한 공무원 징계 요구안을 징계위원회에 상정도 못했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을 거슬러 경징계 의견을 요구했다.

전보정당 후원이 ‘실정법’ 위반이므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징계를 통해 보수 성향의 교육감과 지자체장 등을 견인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경징계로 파면·해임을 피해보자는 심정은 이해할만 하지만,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부당한 현실을 인정 것은 문제가 있다.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 교사·공무원탄압저지서울공대위 등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징계를 요구한 김상곤 교육감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임 진보 교육감·야당 지자체장들은 경징계로 후퇴하지 말고, 최소한 전남·전북·광주·강원교육감 당선자들처럼 법원 판결 전까지 징계 의견을 유보해야 한다. 물론, 가장 올바른 방법은 징계 자체를 거부하며 싸우는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에 맞서 일관되게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김인숙

KBS노조



6월 23일 <추적60분> 이관 반대 KBS PD 집단 삭발 KBS 노동자들이 이명박의 '김비서(KBS)'가 되기를 거부하다

KBS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7월 1일 파업에 들어간다.

KBS본부는 KBS노조 지도부가 이명박의 대선 언론특보인 낙하산 김인규를 사장으로 인정하자 이에 반발해 PD와 기자 중심으로 결성한 KBS의 새 노조다.

KBS 사측은 KBS본부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 보복 인사, 새 노조 탈퇴 협박 등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에 KBS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93.3퍼센트의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KBS에서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는 사라

지고 있다. 반면 이명박 동정 보도 등이 이어져 ‘맹박 뉴스’, ‘관제 방송’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KBS본부 엄경철 위원장은 “KBS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면서 이번 투쟁은 “공영 방송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싸움”이라 말했다.

조합원인 이강택 PD는 “파업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투쟁을 “밑에서는 다들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KBS 시청료를 대폭 인상하려 한다. 불공정한 방송을 보는 것도 짜증나는데 돈을 더 내고 보라는 것이다. 대신 KBS에서 광고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종동이 진출할 종합편성채널로 광고를 몰아 주려는 속셈이다.

KBS본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친정부 방송을 위해 시청료를 더 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시청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광범위한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필요하다. 실제 1986년에 KBS의 친독재 편파 보도에 항의해 전 국민적 시청료 거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KBS본부는 단호한 파업으로 친사측인 KBS노조보다 새 노조가 조합원들의 고용과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함을 입증해야 한다.

박건희

일제고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전국의 학생들과 학교들이 경주마치럼 달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7월 13·14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기 때문이다.

일제고사 후에 학생들에게는 과목에 따라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의 4단계로 성적을 알려주고, 학교별로는 3단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개인,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경쟁을 더욱 다그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국영수 보충수업(요즘은 방과 후 학교로 불린다)을 하느라 들들 볶이고 있다. 학생들은 여기에 반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참고서를 구입하라고 몰래 권유하고 있다.

초등 사교육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학생들의 삶의 질

정부는 마치 학력만 신장되면 학교가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학력 경쟁이 심해질수록 학생들은 점점 불행해진다. 학생들에게 필

요한 것은 친구조차 적으로 삼는 경쟁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지낼 때 행복하다.

최근 당선한 대부분의 진보 교육감들은 일제고사에 반대한다.

그래서 진보 교육감들은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응시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발’ 운운하며

몰려서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과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분위기 속에서 체험학습과 응시 선택권을 안내하는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탄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무한 경쟁으로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들을 고통스런 경쟁에서 구출하기 위해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김성보 경주중학교 교사

김상곤 교육감의 우려스런 행보

경기도교육청이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을 징계하고, 체험학습을 금지하고,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매우 실망스런 결정이다.

김 교육감은 얼마 전에도 전보정당 후원 교사들을 경징계기로 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그는 직무박탈을 위협하는 정부의 공격 속에서 “국가 위임사무(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경기도교육청)는 결론으로 나아간 듯하다.

그러나 이런 타협은 정부와 우파의

공격을 중단시키기는커녕 기반 살려줄 것이다.

오히려 일제고사와 교사 징계를 거부하며 대중적 지지와 연대를 건설할 때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막아낼 수 있다.

그래야 진보 교육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진보 교육감이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면 사람들은 그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실에 타협해 실망을 안겨 주면 외면할 수 있다.

박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환경미화 노동자

다시 시작된 아름다운 연대투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학생들도 이 투쟁에 연대하며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실질적인 인력 충원, 아침식사 제공, 휴게공간 확충, 최소한의 응급치료 지원 등이다. 이것은 끔찍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해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해 밤샘 심야 근무까지 소화해야 할 정도로 장시간 일하고 있다. 휴게공간도 비좁고 열악해 석면가루가 떨어지는 방에서 식사를 해야 할 정도다.

악랄한 병원측은 노동자들이 청소하다가 주사 바늘에 찔리고 피고름을 만지다 감염될 경우에도 응급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병원 관계자는 “계약 다시 할까요? 고용승계 없습니다!”라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6월 24일에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에는 총학생회, 문과대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다함께, 학생행진 등의 학생들과 민주노총 북부지구협의회 등 1백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학생들과 함께 싸워서 패배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싸워서 꼭 승리하자”고 결의를 높였다. 굳건한 단결로 여러 대학들에서 계속돼 온 노동자·학생 연대의 승리를 이어가야 한다.

김준호

건설노조

이주노동자와 단결해 싸우는 건설노동자들

내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어깨 걸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군포시 당동 LH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70여 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똑같은 근무시간에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맺으려고 29일째 파업하고 있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해 함께 싸우고 있다.

건설 기업주들은 흔히 국적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을 달리해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며 열악한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다.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가장 힘든 일을 행한 저임금을 받으며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의 투쟁은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투쟁을 지부만의 투쟁으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건설노조 본조와 수도권본부가 직접 나서 단체협약 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경남기업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박재순 건설노조 수도권본부 북부건설기게지부 지부장



《PD수첩 - 진실의 목격자들》, 김보소 외
북 풀리온, 1만 6천 원, 387쪽

피에르 부르디외는 언론의 사회적 속성에 대한 텔레비전 담화 형식의 연설문이자 한국에도 번역 출판된 저서 '텔레비전에 대하여'에서 언론이 자본과 권력에 얼마나 쉽게 종속될 수 있는지 비판했다.

자유로운 언론, 언론의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1987년 거대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야 형식적인 자유를 일부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PD수첩>은 첫방송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초의 기획자부터 송일준 PD, 김보소 PD 등 <PD수첩>의 20년을 함께해 온 제작자들은 매년 진실을 정직하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못매를 맞아야 했다. 천안함 의혹 제기, 광우병 위험 폭

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비판하고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다뤘다는 이유 등으로 말이다.

<PD수첩>의 최초 기획자인 김운영 PD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밝히고 알릴 수 있다면,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떤 직종이든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물음마저 제기하기 힘든 사회가 지난 20년,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다. <PD수첩>과 함께해 온 제작자들의 인터뷰에는 그 상흔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PD수첩>의 제작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고된 삶이었지만 보람된 삶이었다고 말이다. 1990년 5월 8일에 방송될 <PD수첩> 첫 방송의 예고편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그런 세상을 위한,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다짐들이 그 고통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자

보람을 느끼는 이유일 것이다.

광우병 위험에 대해 폭로한 이후 PD들이 잇따라 보직 해임되는 상황에서 김환균 PD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20년 동안 한 발자국씩 걸어서 이만큼의 언론 상황을 만들어 왔지만, 되돌아가는 건 한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하는 데 또 20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짧아지지 않겠느냐”.

들어가는 글에서 이주갑 MBC시사교양국장은 “회고로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성은 다짐으로 후회는 회초리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은 어쩌면 이 책을 읽을 모든 이들에게 호소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자신들이 했던 다짐을 지키기 위해 늘 누군가를 인터뷰하던 그들이 인터뷰 대상이 됐다. 그들의 존재, 그들의 역사가 ‘진실’이기 때문이다.

더는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그 진실을 목격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박용석

노동자들이 쓴 삶과 희망

월간 <작은책>이 창간 15주년을 맞아 이제까지 실었던 글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책 세 권으로 엮었다. <도대체 누가 도둑놈이야?>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린 글을 담은 세번째 책이다.

이 책에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직접 쓴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한 달에 2억 3천만 원을 버는 사장, 그런데도 한국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에게 시급 3천1백 원만 주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베트남 도둑놈 1, 2, 3호, 필리핀 도둑놈 1, 2, 3호” 하고 부른다. “이런 젠장... 도대체 누가 도둑놈인지 ...”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생명줄이 조금씩 타들어간다. 내년에 다시 계약할 수 있을까? 1년 살이 비정규직”의 한숨.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교사가 “선생님, 우리랑 같이 졸업 못

해요?” 하고 울먹이는 학생을 보며 마음 아파한 이야기.

한 이주노동자는 한밤중 숙소로 찾아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는 작업 반장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던 끔찍한 기억을 털어놓는다.

땅바닥, 화장실, 단광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노동자들, 저녁 7시부터 밤을 꼬박 새고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밥 한 끼 못 먹고 일해야 했던 환경미화 노동자들...

21세기 한국의 현실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하철에서 흔히 마주칠 만한 평범한 사람들이 한 자 한 자 써 내려간 자신의 이야기는 분명 우리가 눈감지 말아야 할 진실이다.

이 책은 아픔만 아니라 희망도 전한다.

삼성SDI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다 구속된 김성환 위원장의 부인 임경옥 씨는 우유 배달을 하며 힘겨운 삶을 살지만

《도대체 누가 도둑놈이야?》
작은책 엮음
9천5백 원, 312쪽



“삼성폭발의 파렴치한 행위들을 낱알이 이 사회에 고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며 투지를 꺾지 않았다.

하루 17시간을 일하던 양천구청 환경미화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항의를 하자 세면실을 만들고, 수당을 인상하고, 근무시간도 조정됐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쌍용차, 이랜드, 기룡전자 등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주부, 학생 등이 일상에서 겪는 이야기 등 64가지 짧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 평범한 사람들의 한숨, 눈물, 웃음, 희망을 마음으로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정선영

우리는 왜, 어떻게 누구에게 이끌리는가?

《이끌림의 과학》
바이런 스와미·애드리언 편협
알마, 1만 5천 원, 336쪽

외모는 취업에서, 교제, 결혼, 자궁심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가장 중요한 ‘미적’ 대상 중 하나다.

그러나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은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쁨보다는 고통을 안겨 주기 일쑤다.

저자들은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낳는 폐해를 극복하려면 육체적 매력에 대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원래 ‘아름다움’의 문제는 오랫동안 인문학자·철학자의 전유물이었지만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신체의 ‘아름다움’에 관한 연구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 책은 육체적 매력과 연인들이 서로 이끌리는 과정에 대한 광범한 심리학 연구들을 자세히 다루는데, 이것만으로도 관심 있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육체적 매력을 설명하는 데 가장 관심이 많은 이들은 진화심리학자들인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은 인간의 마음(정신)도 다른 신체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통해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형질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왜 여성들은 키가 180센티미터인 남성을 좋아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진화심리학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것은 ‘여성들이 생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성의 우수한 생식능력을 나타내는 표지(180센티미터의 키)에 이끌리는 방향으로 진화적으로 적응한 결과’다.

웁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설명방식이 갖는 분명한 장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점이랄까.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 ‘미학’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반면, 진화심리학자들은 육체적 매력 뿐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이끌리는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들의 연구는 다양한 환경·문화적 요인들이 육체적 매력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근접성, 비언어적 의사소통, 비육체적 특성 등이 이끌림의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이 책이 그저 흥미로운 심리학 연구들의 진열장인 것은 아니다. 저자들은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특히, 진화심리학은 흔히 결정론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끌림이 일어나는 현재의 사회적 맥락을 경시하면서 아름다움을 객관화했고, 그럼으로써 흠이 ‘헛된 탐구’라고 이름 붙였을 만한 일을 했다.” “현재의 생태학적 요인에 대한 판단이 부재한 진화심리학의 해석 틀은 인간의 의사 결정과 태도 형성 과정에 있는 중요한 면들을 쉽게 놓쳐 버린다.”

저자들은 기존 심리학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화심리학자들의 생물학적 모델과 사회심리학자들의 문화적 모델을 결합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저자들이 육체적 매력의 문제를 사람들의 미적 선호에 악영향을 미치는 패션과 미용 산업에 대한 분석에까지 확장시켜 다루는 것도 흥미롭다.

육체적 아름다움과 이끌림, 본성과 학습의 관계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재미 있고 유용할 것이다.

이상우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6호 (2010년 여름)

정기구독 문의
02-2268-7608
www.marx21.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106-6 2층(100-272)
전화 02-2268-7608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이메일 marx21@marx21.or.kr

〈초점〉
천안함 사건을 통해 본 동아시아 질서 변동과 한반도 _ 김하영
유럽의 위기와 저항 _ 알렉스 캘리니코스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 _ 최규진

〈특집 1: 경제 위기와 중국 모델〉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_ 이정구
‘중국 모델’을 둘러싼 최근 좌파들의 논의 _ 김용욱

〈특집 2〉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_ 알렉스 캘리니코스

〈현대 진보사상 조류〉
정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 존 롤즈 <정의론> 읽기 _ 최일봉

〈시리즈 기획 한국경제2〉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_ 강동훈

〈마르크스주의와 역사〉
한국전쟁, 누구의 전쟁인가? _ 한규한

〈서평〉
노회찬 외, <리얼 진보> _ 정병호
키어런 앨런, <막스 베버의 오만과 편견> _ 이현주

예리한 분석으로 진실을 말하는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1년여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0,000원
□ 2년(52개 호) 100,000원

입금 계좌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39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레프트21에서 접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⑤

계획경제는 불가능한가?

다섯 호에 걸쳐 실리는 이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연재다. **박설**이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08년 말, 세계의 심장부 미국에서 대규모 경제 불황이 시작됐다. “월가의 기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화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마이클 무어도 영화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에서 자유시장의 작동 방식에 통렬한 비판을 제기했다.

“왜 고통을 겪는 건 항상 가난한 자들인가? 왜 [카트리나 참사 때] 지붕에서 도움을 청하는 건 … 시티뱅크 회장,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매니저, AIG의 CEO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마이클 무어는 이렇게도 말했다.

“자본주의는 악입니다. 악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예 근절하고 모두를 위해 좋은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마이클 무어가 사회주의자가 된 건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마이클 무어도 ‘시장의 조정 능력’이라는 게 거짓일 뿐이며 체제가 노동계급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하고 있음을 목격했다.

세계경제는 지난해부터 회복한 듯 보이지만, 유로존의 위기와 이른거리는 더블딥 가능성이 여전히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 속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책은 고작 기업들의 생존을 최대한 보장해 현 시기를 잘 넘겨보자는 식이다. 긴축이든 경기부양이든 위기를 근본으로 해결할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경제 평론가인 마틴 울프조차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껏해야 자본주의가 “가장 덜 나쁜 체제”라는 항변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일찍이 마르크스주의가 제안해 온 민주적 계획경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계획경제라니! 그것은 경제에 성장 동기를 전혀 부여하지 못하는 북한의 낡은 방식이 아니던가?’

시장의 동기부여가 일할 의욕을 만들고 인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얘기는 이 사회의 ‘상식’으로 통한다.

그러나 사람들을 무기력한 임금 노예로 만드는 시장경제는 노동자들에게서 창의력과 일할 의욕을 빼앗아 왔다.

시장 경제의 성장 ‘동기’는 오직 이윤 경쟁이며, 이 무정부적인 이윤 경쟁은 지금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다(이 연재의 첫 번째 글을 보시오). 그리고 이 이윤 논리는 지금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복지와 일자리를 위협하는 주범이다.

더구나 지금 시장주의자들마저

‘시장 실패’ 상황에선 국가의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008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은행 국유화 등을 통해 위기의 확산을 막으려 발버둥쳤다.

물론,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계획은 이명박이나 오바바식의 국가 개입과 완전히 다르다. 이명박과 오바마가 부자들을 살리려고 시장경제에 개입했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민중의 필요라는 정반대의 가치를 위한 개입과 계획을 말한다.

우선순위

민주적 계획경제는 꼭 필요하

다.

당장에 기후변화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시장경제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다.

석유와 자동차 경제에 절대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대 기업과 정부 들은 시장에서의 이윤 경쟁에 매달리며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내팽개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경제가 이윤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작동한다면, 풍력·파력·태양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즉시 도입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과 기차와 버스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원칙을 주택·복지·일자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전 국가, 전 지구적 차원의 계획을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투자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결정한다면, 지역 수준의 협력적 기구들이 이에 바탕을 두고 생산과 분배를 조직할 수 있다.

사실 계획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생소한 것이 아니다. 개별 기업들은 매년, 매분기, 매달, 심지어 매일매일의 계획을 세우고 운영해 왔다. 그렇다면, 왜 이윤 확보를 위한 개별 기업들의 계획을 전 사회적 필요에 따른 계획으로 대체할 수 없단 말인가?

이런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계획 조처들은 과거 소련이나 북한의 계획경제와는 다르다. 소수 특권을 두고 관료들이 권력을 독점해서, 인민은 굶주리는 데 미국·남한과의 경쟁을 위해 미사일·핵무기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관료적 지령경제이지 민주적 계획경제가 아니다.

따라서 문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통제에 바탕을 두고 인류의 필요를 위해 생산·분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선출권뿐만 아니라, 소환권이 실질적으로 대중에게 주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민주적 계획경제의 가능성을 보여 준 위대한 사례다. 우리가 이런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로지 노동계급의 투쟁에 달려 있다.

논설

정부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후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직 임기가 절반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이명박 정부는 여기저기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6월 29일, 국정원과 경찰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지령수수’ 등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한총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욱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국가보안법까지 꺼내 휘두르며 탄압에 매달리는 것은 정부가 강력하지 않고 오히려 취약하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북풍 물리로 우파들을 결집시킬 뿐 아니라 사회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했지만, 역풍에 부딪혔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집권당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드러내며 부결됐다.

양천서 고문 사건은 일선 경찰서장이 ‘상명하복’을 뒤집고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4대강 사업도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고 조만간 대규모 행동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민주적 권리 공격은 곳곳에서 불만을 쌓아 왔다. 이런 불만과 분노들이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권력 누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 ‘위기 해소를 위해 대통령의 탈당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니 총선’이라는 7·28 재보궐 선거에서 또다시 완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한미FTA 재논의를 합의한 것을 두고 “더러운 거래”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제2의 촛불’ 경고도 제기됐다.

마녀사냥

이 때문에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마녀사냥으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해 불만을 억누르고 위기의 속죄양을 만들려 한다.

앞서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한테 천안함 관련 의견서를 보내자, 정부는 “반국가적 종북 이적 행위”

라며 마녀사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아무리 탄압해도 국민들이 참여연대를 후원·지지하[면서] … [정부는] 국민들의 조롱거리”(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돼 버렸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진북’을 빌미로 마녀사냥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한국진보연대로 탄압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근래 탈북자나 정부 승인 아래 방북했던 사람 들을 대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가보안법 적용과 탄압을 확대해 왔다.

역대 정권들은 자신들의 정치 위기를 모면하고자 국가보안법의 칼을 휘둘러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좌파들을 속죄양 삼았다.

참여연대에 대한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는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목적이 정부에 비판적인 운동과 단체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임을 보여 줬다. 한국진보연대 간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조금치도 위축되지 말고 힘을 합쳐 이런 탄압에 맞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를 더 궁지로 내몰아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해임은 미국 전쟁의 위기 해결 못 해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킹스 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1951년 4월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한국 주재 유엔군 사령관이던 육군 장군 더글러스 맥아더를 해임했다.

그 전해에 맥아더는 중국이 보복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 접경에서 무모하게 북한군을 공격했다.

중국군이 실제로 한국으로 진격하자 유엔군은 남쪽으로 밀려났고, 맥아더는 패닉에 빠져 중국에 핵공격을 하자고 주장했다. 의회 내 반대파 리더에게 보낸 서한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돼 맥아더는 낙마하게 됐다.

지난주(6월 24일) 버락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나토 국제안보지원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을 경질했다. 맥크리스털의 직책은 맥크리스털 자신과 측근이 〈롤링 스톤〉의 마이클 해스팅스의 기사에서 오바마와 부통령 조지프 바이든과 고위 당국자들을 비난한 것이었다.

두 사건은 미국 제국의 쇠퇴와 관련된 무언가를 암시한다. 맥아더 해임은 냉전기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일어난 거대한 충돌이었다. 이번에는 〈롤링 스톤〉에서 목소리를 높인 대가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장의 사령관이 해임됐다.

맥크리스털 해임에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는가? 미군이 마조적이고, 정치인들과 민간인 관료들을 경멸한다는 것은 뉴스거리도 안 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흥미로운 논점을 제기했다. “2001년 이래로 사령관 십수 명이 이라크 사령관, 아프가니스탄 사령관, 그리고 이 둘을 총괄하는 중부군 사령관 자리를 거쳐 갔다. 이 세 사

령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 압력에 떠밀려 해임되거나 사퇴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 많은 최고사령관이 하는 일은 진급에 도움이 되는 군사 기술과 거의 관계가 없다고 군 지휘관들은 말했다. 오늘날 전쟁에서 최고사령관은 근대 총독처럼 군사 작전과 주요한 경제 개발을 총괄해야 한다. 최고사령관들은 자신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 나라의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사악한

미군 특수부대라는 사악한 암흑의 한복판에서 경력을 쌓은 맥크리스털은 제국의 총독이 되는 데 필요한 자질이 부족했을 뿐이다. 그러나 아마도 고위 장교들의 인사 이동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실제로는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과 관계 있을지 모른다.

사실, 〈롤링 스톤〉 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은 맥크리스털의 백악관 비방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전쟁 상황 묘사다. “6월, 전체 미군 사망자수는 1천 명을 기록했고 급조폭발물(IED) 공격은 갑절로 뛰었다. 지구에서 다섯째로 가난한 나라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도 민간인들을 포섭하는 데 실패했다. 미군을 바라보는 민간인들의 태도는 광장한 신중함부터 공공연한 적개심까지 다양하다.”

올해의 가장 큰 군사 작전(마르자 남부 마을을 탈환하려고 2월에 시작된 흥

포한 공격)의 결과가 지지부진하면서 맥크리스털은 스스로 그것을 ‘악성 궤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6월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베트남 전쟁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이 됐다. 오바마는 자신이 정한 미군 철수 시한[내년 6월]에서 조용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자신이 수령보다 훨씬 더 나쁜 무언가에 빠져 있음을 안다. 오바마는 자신이 대규모의 지리한,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 건설 계획에 뛰어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놓고도, 그는 이 수령에 스스로 걸어들어갔다.”

2011년 6월이라는 철권 목표는 오바마와 군부 간 갈등 고조의 원천이 될 공간이 크다. 오바마는 맥크리스털을 그의 직속상관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로 교체했다. 페트레이어스는 중부군 사령관이고 2007~08년 이라크를 안정시킨 미군의 변화를 설계한 인물이다.

페트레이어스는 대(對)게릴라전(맥크리스털이 성공하지 못한)의 최고 이론가다. 대체로 페트레이어스는 맥크리스털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더 예리하다. 그러나 〈롤링 스톤〉 기사가 발표되기 직전 의회 증언에서 페트레이어스는 1년 안에 철군을 시작하겠다는 오바마의 계획에 분명한 비판을 나타냈다.

미군이 이기지 못하는 전쟁에서 분투하는 동안 정치적 희생자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아마도 대통령 자신이 그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

번역 차승일

맑시즘2010

7.22(목)-25(일)

고려대학교(성외중)
주최: 다함께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

맑시즘은 국내에서 가장 크고 다채로운

진보 포럼입니다. 10년을 맞은 **맑시즘2010**, 올해도 활동가들과 진보적 학자들이 총출동합니다. 여러분을 설레게 할 65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에너지 충만한 토론이 오고 갑니다. 나흘 동안 1천5백 명이 머리를 맞대고 이 시대의 대안을 고민하는 곳, 활짝 문 열고 기다립니다. 맑시즘을 만나러 오세요.

- **알짜배기 주제 65가지**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 **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연사들**
활동가와 진보적 학자들이 풀어놓는 연구 성과, 경험, 방향 제언
- **패널 논쟁으로 진보운동 내 논점을 한눈에**
핵심 논자들의 주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 토론**
모든 참가자들에게 3~4분의 발언권 보장

알찬 방학 · 알찬 휴가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

지금! 참가신청하세요

www.marxism.or.kr

전화 02-2271-2395 문자 메시지 문의 010-2208-2395
marxism2010@marxism.or.kr

참가비: 하루 13,000원(22일만 7,000원)

나흘 40,000원

- **대학생 할인** 하루 11,000원(22일만 5,000원)
나흘 30,000원
- **청소년 · 이주노동자 · 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할인**
하루 5,000원(22일만 3,000원) / 나흘 15,000원

10명 모아 할인 받자! 단체할인

- 동아리 · 학생회 · 노동조합 · 소모임 등 한 단체에서 10명 이상, 나흘 티켓을 구입하면 15퍼센트 추가 할인!
- 단체할인가 34,000원 ● 대학생 25,500원
- 청소년 · 이주노동자 · 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12,500원

※ 숙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전화 문의하세요.



맑시즘2010을 주변에 널리 알려 주세요.
맑시즘 웹사이트에 블로그용 배너 등 다양한 웹홍보물이 있습니다.

내가 맑시즘을 추천하는 이유



허중강
한울노동문제
연구소 소장

‘다함께’ 회원이 아니면서도 내가 매년 ‘맑시즘’ 행사에 찾아가는 이유는, 요즘 같은 시대에 수 백명의 청년,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맑시즘’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며칠 동안 북적거리는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정파를 초월하여 모인 사람들이 수십 개의 강의와 토론으로 밀도 있게 시간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라라는 생각으로 목석이 목석해지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한동안 버틸 힘을 얻는다.

후원: 6월 30일 현재 112개 진보단체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위기 분석,
250만 그리스 총파업 소식을 들려줄 국제 활동가들



니코스 루도스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기고가이자 최근 그리스에서 출판된 《그리스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위기》의 편저자

- 유럽의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들의 저항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의 연속혁명



조세 추나라

마르크스주의 경제 분석 저술가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 경제 위기는 끝났는가, 이제 막 시작인가?
-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들 -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변화하는 세계 체제 - 미국의 세기인가, 다극화된 세계인가?

놓칠 수 없다! 대가에게 듣는 명강연

한홍구 《대한민국사》 저자

-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역사
- 5·18에서 1987년까지

정성진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좌파 현대세계경제론의 비판적 재구성
- 하비, 아리기, 브레너를 중심으로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 노동운동은 여전히 희망인가?

김진숙 《소금꽃나무》 저자

- 경제 위기 시대,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내 최초 트로츠키주의자

- 트로츠키의 사상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 유전자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가?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범죄 · 사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정책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 부동산 거품, 미국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끝나지 않은 경제 위기, 대안을 모색한다

- 케인스주의는 무엇이고 경제를 구할 수 있는가?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토론자: 이정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스웨덴 모델 - 복지국가의 역사와 교훈

신정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토론자: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 금융세계화 - 금융의 발전으로 자본주의가 변했는가?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 발전국가 논쟁 - 박정희 시대의 개발 정책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김신영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외래교수 & 이상우 다함께 활동가

- 민주적 계획경제는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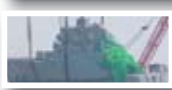
이정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뜨거운 현안과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만남



- 한국 경제, 불안정한 회복의 미래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 지각 변동 중인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김하영 〈마르크스21〉 편집자



-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인가?

이정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텐안먼에서 티베트, 홍콩 파업까지 - 중국의 저항운동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 삼성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가?

박성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이명박 정부의 이주 정책과 인종주의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 NPA

이기용 경북대학교 러시아어과 교수



- 신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이제 끝났는가?

장시복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사회적 공헌으로 기업은 착해졌는가?

변해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분단과 한국전쟁

한규한 경성대학교 정치경제학대학원 역사학 전공

- 재정 위기와 공공부문 '선진화'

- 세계는 왜 이토록 가난한가?

노동운동 · 사회운동의 리더, 활동가, 명연사들이 온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김진숙 《소금꽃나무》 저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홍구 《대한민국사》 저자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손호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패널 토론 - 진보와 운동을 고민한다

- 의료 민영화 어떻게 막고, 의료보험 보장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김진경 전 서울대병원노조 위원장 외

- 진보진영 정치제편 논의 - 연합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 김민식 〈레프트21〉 발행인 외

- G20 -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 주재준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 김여진 다함께 G20 대응팀장

- 기후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를 - 에너지 · 사회 체제 전환과 녹색 일자리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 &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 87년-97년-08년 체제 논쟁과 진보진영에 주는 함의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손호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88만 원 세대의 운동론 모색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 정병호 다함께 운영위원

맑시즘2010이 추천하는 맑시즘 시리즈 강좌

- 마르크스주의의 ABC

- 왕초보를 위한 자본론

- ① 부는 누가 만드는가?

- 자본가인가, 노동자인가?

- ②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 사회주의의 진정한 전통

- WHAT 시리즈

- ①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 ② 계급주의

- ③ 국가자본주의

- 옛 소련과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인가?

- ④ 국제주의

- ⑤ 계급과 억압 - 마르크스주의는 환원론인가?

- 마르크스주의의 ABC

- 마르크스의 방법

- ① 유물론과 변증법

- ② 소외

- 사회주의의 진정한 전통

- WHO 시리즈

- ① 마르크스

- ② 레닌

- ③ 트로츠키

- ④ 로자 룩셈부르크

- ⑤ 그람시

여성/성 해방을 위한 투쟁

- 낙태 - 죄인가,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정진희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투쟁 심신혜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교육문화부장 외

- 여성 억압의 근원 - 여성은 왜 차별 받는가?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 누가 왜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가? 권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다른 교육 다른 학교를 꿈꾼다

- 비교초차와 참교육

천보선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 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가제)

전교조 교사

- 대학 기업화와 그에 맞선 저항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 청소년을 위한 교실 밖 이야기(시리즈 강좌)

- ① 청소년 인권

- ② 어, 기후가 왜 이래?

김성보 경주중학교 교사

- ③ 우리 교실 이주민 친구들

이은하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교육문화팀장

- ④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역사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arxism.or.kr에서 확인하세요.
포럼 주제는 (연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놀이방 · 문화행사 · 서점

- 영화와 음악 등 문화행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좋은 사회과학 서적을 대폭 할인 (10~50퍼센트) 판매합니다.
- 어린이 놀이방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휠체어를 무료 대여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arxism.or.kr에서 확인하세요.